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통일연구원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7,5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무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
서재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연구총서 ; 04-14)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56-X 93340

320.911-KDC4
330.95193-DDC21

CIP2004002247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II.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 변화의 동인: SULNAM	7
III. 7·1조치의 배경	9
1. 지하경제 성행의 배경	20
가. 경제난과 체제응집력 약화	20
나. 불만세력의 가치관 변화 주도	22
다. 간부들의 부패와 뇌물	26
2. 지하경제의 합법화 배경	29
가. 공식경제의 붕괴와 암시장의 번성	30
나. 북한주민들의 태업	34
다. 국가재정의 고갈	38
라. 대량아사 사태의 충격	40
IV. 7·1조치 이후 경제체제의 변화: 시장사회주의 요소의 확대	43
1. 계획체제의 부분 해체와 시장요소의 도입	44
가. 생산부문의 시장요소 도입	45
나. 유통부문의 시장요소 도입 암시장의 자유화와 종합시장의 도입	54
다. 무역의 활성화	63
2. 화폐경제, 상품경제 및 소상공생산제의 도입	64
가. 가격의 현실화	64
나. 화폐경제제도의 도입	66
다. 소상공생산경제 요소의 발아	68
라. 사영화의 맹아	73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3. 이윤과 경쟁의 도입	75
가. 이윤 추구하고 실리사회주의	75
나. 경쟁 개념의 강조	81
4. 임금노동제 도입	82
가. 임금노동제의 도입	82
나. 노동동원 양식에서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85
5. 부분적 개인영농제 도입	87
6. 사회보장제도의 후퇴와 국가기능의 변화	89
가.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시장으로의 전가	89
나. 국가의 기능변화: 공급기능에서 징세기능으로	92
7. 소결: 7·1조치의 의미와 한계	93
V. 7·1조치 이후 사회부문의 변화: 시장사회주의 사회화	97
1. 경제생활의 변화	98
가. 장사의 자율화	98
나. 생활고 가중	101
다. 계층별 손익의 차이	103
2. 가치의식의 변화: 시장지향적 태도의 강화	106
가. 국가의존적 태도의 약화와 시장지향적 태도의 강	106
나. 물질주의	110
다. 개인주의	112
라. 자율성·자유주의	113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3. 정치적 태도의 변화	115
가. 사회주의 패배의식의 확산	115
나. 개혁·개방에 대한 욕구 증대	118
다. 김정일에 대한 개혁·개방의 압력 증대	122
라. 불평등 증대와 간부계급에 대한 적대감 증대	126
4. 사회질서의 변화	129
가. 가족내 질서의 변화	129
나. 사회질서의 아노미	130
5. 소결: 북한사회의 르네상스적 징후	131
VII. 북한체제 변화의 단계 평가	135
1. 북한체제의 변화 내용	135
2. 시장사회주의 단계	139
3. 향후 북한의 변화 추세 전망	144
VIII. 요약 및 토론	149
참고문헌	15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9

서론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하였던 정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사상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서 지금까지의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된다. 둘째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서 소련의 브레즈네프 시대가 그러하였고, 고르바초프의 초기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정책도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셋째는 사회주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를 개혁하는 유형으로서 등소평 이후의 중국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 1990년대 북한의 나진·선봉경제특구,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일부 한정된 지역의 실험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상적 동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노동자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려 했던 것이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처방의 핵심이다. 천리마운동, 속도전 운동,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 등이 그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

¹ 양문수,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운용과 과학중시 정책,” 『통일문제연구』, 제13권 1호 (2001), p. 193 참조.

괴이후 체제위기 국면에서 경제난 해결뿐만 아니라 체제단속용으로 사상의 통제를 우선시하였다.

북한에서 2000년대 들어서 IT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이 등장했던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 종전의 사상을 중시하던 유형에서 벗어나 기술 중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이 2002년 7월에 시작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사상에 의존하던 생산성 향상의 전략이 실패하였음을 인식하고 제도 개혁을 도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자유무역특구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일부지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북한이 7·1조치를 취한 것은 이전의 정책변화에 비하면 획기적인 조치로서 체제의 근간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2002년 7월 1일에 취해진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의 경제제도, 경제운용방식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 단행된 조치이다. 7·1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발표된 김정일의 담화에서 김정일의 변화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신적 안목에서, 발전적 견지에서 보고 대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의 경제관리체계와 경제관리방법이 그때에는 옳고 좋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관리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그대로 쥐고 있어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²

²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담화 2001년 10월 3일),” p. 2 <http://nk.chosun.com/original/print.html?year=&original_id=584>.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신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대목, 과거의 것은 낡고 뒤떨어진 것이라는 인식은 과거에 “나에게서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를 드러내준다.

7·1조치는 북한의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나온 자구적인 조치이며,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나온 수세적 조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7·1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계획경제는 가동이 될 수 없고 ‘대안의 사업체계가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7·1조치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계획체제에 시장 요소를 대폭 도입한 것이 7·1조치의 본질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북한과 접촉해온 북한 전문가 브래들리 뱁슨 세계은행 아시아담당 고문은 미 상원에서 가진 회견에서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1946년의 토지개혁 이래로 가장 획기적인 경제조치였다고 평가하였다.³

실제로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개혁하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며 그 영향이 심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행 연구에서 7·1조치의 의미와 영향이 잘못 평가되고 있다.⁴ 또한 북한의 7·1조치는 공급이 따르지 못하여 실패한 정책이라고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7·1조치의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7·1조치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7·1조치라는

³ 『자유아시아방송(RFA)』, 2003년 6월 24일.

⁴ 이석, “북한의 중앙계획자, 과연 타율을 던졌는가?,”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4.6) 참조.

새 정책이 형성된 과정이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7·1조치가 단순히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북한 당국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7·1조치가 취해지기까지 북한에서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내용을 간과한 데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다. 7·1조치는 단순히 북한 당국이 주도한 개혁조치로 볼 수가 없다. 북한 당국이 7·1조치를 결정하였지만 7·1조치가 결정한 내용은 이미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내용들이다. 비공식적·비합법적으로 추진되던 관행을 당국이 논리를 세워서 양성화해준 셈이다. 북한 당국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배경은 북한 당국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암시장경제가 만연해있었고 공식경제는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공식경제를 재건하기 보다는 암시장경제의 동태성을 경제회생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체제변화의 의미를 두 가지 논지로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는 변화의 방향이 경제부문에서는 시장사회주의의 방향으로 변화하며, 사회부문에서는 경제부문의 변화에 조용하여 시장사회주의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체제의 변화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는 것이다.

첫째 주장은 북한의 7·1조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치라는 일부의 입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이 글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시장지향적 개혁으로서 획기적 변화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사회주의를 향한 변화이며, 경제부문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부문에서도 시장경제적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명분상 입장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장은 7·1조치는 당국의 주도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하여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붕괴하여 경제체제의 변화가 저절로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경제난에 대응하여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척해낸 암시장 때문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도한 변화가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이 국가통제와 간부들의 억압을 뇌물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면서 일구어 낸 변화이다. 국가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동력이 경제체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이 글의 한 목적이 있다.

이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의 북한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정책만을 판단의 근거로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적 변화의 동태성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나아가서 7·1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다. 7·1조치가 취해졌을 때 암시장을 통제하여 국영상점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오히려 암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시장을 양성화한 것을 보더라도 7·1조치는 당국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사회 변화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시장사회주의’의 개념에 주목한다. 시장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상품경제의 개념은 중국에서 198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1992년부터 시장경제의 주도성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시장사회주의 개념이 북한의 현 체제를 규정하는 데 적절한 개념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한 예가 있다. 2003년 11월 6일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에서 남북 대표단장이 주고받은 대화의 한 대목이다. 김광림 남측 대표단장이 “북에 시장이 들어섰으니 시장에 경제를 붙여 시장경제로 부르자”고 제의하자, 북한의 최영건 대표단장이 “그건 안 된다, (북한의 변화는) ‘시장사회주의’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북한의 고위관료가 ‘시장’과 ‘계획’의 결합을 의미하는 ‘시장사회주의’란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점이 이채롭다. 북한에서는 7·1조치 이후의 북한체제를 지칭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는 ‘실리사회주의’란 말을 쓴다. ‘실리사회주의’란 용어는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북한식 표현법으로 볼 수 있다. 시장주의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시장사회주의와 실리사회주의는 이전 북한의 고전적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은 북한의 경제와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분석한 뒤 북한의 변화된 체제가 이전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자 한다.

시장사회주의화 추세와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주도라는 두 가지 명제를 논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국과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의 주도적 동인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7·1조치는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으며 7·1조치를 낳게 한 사회변동의 동인은 무엇인가? 7·1조치는 어떤 경제체제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그것은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중국,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사례와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북한의 향후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 변화의 동인: SULNAM⁵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국과 베트남의 변화 과정과 변화 동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변화는 소련이나 동구의 유형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국가들의 유형을 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편으로 중국 및 베트남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정권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2원적이다. 하나는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대외 ‘개방’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사회 전체의 경제와 사회의 ‘개혁’이다. 경제특구는 한정된 지역에 외자유치를 위하여 자본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중국 사회의 변화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 개혁은 포산도호제(包產到戶制, bao chan dao hu, 가족책임농제)를 도입한 이후 전개된 농촌과 도시의 자본주의화이다. 중국은 농촌의 가족책임농제가 실시된 이후 농민들이 주도한 상업화로 말미암아 경제 전체에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 사회 전반에 급속한 자본주의적 변

⁵ SULNAM은 spontaneous, unorganized, leaderless, non-ideological, apolitical movement의 약자이다.

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 사회전체를 자본주의적으로 개혁한 포산도호제를 도입한 동인이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켈리허(Kelliher)는 중국의 가족책임농제는 국가가 계획한 바가 없으며, 국가지도자들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농민들의 주도로 비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후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합법화되었다고 적절히 지적하였으며 조우(Zhou)는 이러한 논지를 매우 견고한 실증적 자료로 논증하였다.⁶

그런데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개혁적 지도자 등소평의 공으로만 돌렸다. 선천 등의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개방정책은 등소평의 아이디어인 것이 사실이지만 농업의 가족농제는 등소평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중국의 당과 언론이 중국 경제개혁의 공을 등소평의 아이디어와 정책이라고 왜곡하였기 때문이며, 중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서방의 학자들이 중국 당국과 관제언론이 발표한 대로 받아썼기 때문이다. 가령, 초기에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한 연구를 한 캐나다 학자의 주장은⁷ 좋은 예가 된다. 그의 논지는 1978년의 3차 중전회의에서 중국농업의 개혁을 선포하였고, 1979년 9월 중앙위원회에 의하여 포산도호제 실행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수준의 정당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수준의 정당화’란 무슨 말인가. 일반적 개혁노선을 표방한 것이 지 농업에서의 포산도호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⁶ Daniel Kelliher, *Peasant Power in China: The Era of Rural Reform, 1979~198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41; Kate Xiao Zhou, *How the Farmers Changed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1996).

⁷ Michel Chossudovsky, *Towards Capitalist Restoration?: Chinese Socialism after Mao*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6).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개혁·개방의 현장에서 성장하면서 현실을 체험한 중국인 학자 조우에 의하여 행해진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중국 농민들이 도시노동자 중심의 기존 공산당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투쟁 끝에 쟁취해낸 투쟁의 성과물이며, 농민들의 작품이라는 것이다.⁸

그렇다면 전체주의 중국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국가가 합법화하기도 전에 감히 그렇게 체제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일을 주도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전국에 걸쳐서 확산될 수 있었는가? 켈리히는 농가책임 농제가 비법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독재사회주의 중국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조우는 이런 물음에 매우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농민들은 SULNAM의 방식으로 혁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SULNAM이란 포산도호제 관철을 위하여 중국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참여하여(spontaneous), 사회운동의 조직을 결성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행동하였으며(unorganized), 변혁운동의 지도자도 없이(leaderless), 운동 참여자를 결속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도 없이(non-ideological), 그리고 정치적 체제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도 없이(apolitical), 체제변화를 야기한 운동(movement)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⁹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뇌물로 간부들을 회유하여 비공식적으로 토지사용 계약을 맺어서 가족농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SULNAM 전략의 본질은 뇌물인 셈이다. 농민들이 가족농제를 쟁취한 전략은 이전처럼 조직을 형성하여 저항하는 방식이 아니다. 중국 농민들은 1950년대 토지집단화 이후 농민들이 끊임없

⁸ Kate Xiao Zhou, *How the Farmers Changed China*, p. xxvi.

⁹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이 사회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조직, 지도자, 이데올로기, 정치적 목표 등을 강조한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이 저항하고 농가책임제의 옛날 제도를 되찾기 위하여 갖가지 방식을 시도하여보았지만 당국의 억압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경험을 기초로 당국의 반발이 없는 방식인 뇌물로 간부들을 포섭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전의 조직적 저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탄압당하고 실패한 것을 교훈삼아서 전체주의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저항적·포섭적 방법으로 성공한 것이다. 지방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서로 결탁하여 유희지를 임대받거나 국영농장에서 벗어나는 등의 방식으로 포산도호제(包產到戶制, 가족책임농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은 지방간부들과 결탁하여 비밀리에 토지를 팔고 구입하고 임대까지 하였다.¹⁰

중국농민들이 포산도호제를 되찾기 위하여 수십년간 노력한 것은 중국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집단농에 대하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농민들이 자본주의적 농업경영방식인 가족농을 주도하게 된 것은 중국식 사회주의에서 가장 피해를 본 계급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농민들은 중국 사회주의체제에서 버림받은 계급이었으며 집단농에 대하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화 직후부터 오랜 기간동안 저항과 투쟁을 해왔던 것이다. 중국의 농민들이 모택동의 사회주의 정권과 밀월관계를 가진 것은 단 3년 뿐이었다. 농민들은 모택동이 100여 년 동안의 전쟁과 국민적 수치와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모택동의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집권 후 곧바로 농민을 배반하였다. 집권은 농민의 도움으로 이루었지만 사회주의정권의 기반을 농민에서 도시 노동자로 바꾸어버렸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1953년과 1954년 사이 토지개혁과 1955년과 1956년 사이의 농업집단화를 통하여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고

¹⁰ Ibid., p. 55.

농노와 같은 지위로 전락시켰고 과거의 국민당보다 농민들을 더 착취하였다. 산업화 정책으로서 중공업에 주력하였고 농업 잉여를 도시 공업부문으로 이전하였다. 도시는 중국사회주의의 보루로 인식되어 특혜를 받았고,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도시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머슴, 농노로 취급되었다. 도시노동자에게는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의 혜택을 주고 농촌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다. 도시 호구에는 50여 가지의 물건을 공급받는 쿠폰을 주지만 농촌 호구에는 아무런 쿠폰이 없었다. 대약진 운동시기인 1959~1961년 사이에 대규모 기근이 왔을 때 3천만 명이 아사하였는데 그 아사자의 거의 대부분이 농촌의 농민들이었다.¹¹

중국의 도시-농촌간의 차별정책은 카스트제도와 유사한 엄격한 분리 차별정책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정책에 반발하여 농촌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국은 농촌 농민들의 지리적 사회적 이동을 철저히 봉쇄하였던 것이다.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기 위하여 호구제도, 양권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하였다. 사회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심지어 결혼한 여성이 친정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농촌의 시장을 폐쇄하여 시장에도 못가게 하고 시장터에서 벌어지는 민속문화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통제함으로써 농민의 모든 접촉면을 통제하였다. 농촌의 시장은 문화의 장소이기도 한데 그것마저 금지시켰다. 가족과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사회적 유대를 끊었다. 1957년 이후 시장과 시장의 문화 등 모든 것이 소멸되었다.¹²

이 모든 통제권을 가진 농촌의 간부들은 토황제(土皇帝)라 불렸으며 농민들은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는 간부들에 대하여 깊은 적대감을

¹¹ Ibid., p. 35.

¹² Ibid., pp. 31-34.

가졌다. 중국 농민들은 자신들을 착취하여 도시민을 부양하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끊이지 않고 지속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탄압과 무력에 분쇄되고 말았다. 그럴수록 의식화의 정도는 심화되었다. 중국 농민들은 1978년까지 20년간 저항을 하였으나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이전의 당국의 탄압으로 분쇄되고 말았기 때문에 조직적 저항이 무모하였다는 교훈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런 역사적 경험 끝에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지도자 없이 농민 개별적으로, 이를 부추기는 이데올로기도 없이, 체제를 전복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닌 비정치적 방식으로 추진 한 것이다.

농민들의 뇌물과 간부의 부패가 결탁하여 가족책임농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순식간에 이웃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마치 조류독감처럼 확산되었다고 한다. 1980년 봄까지 안후이 지역에서 생산대의 25%가 가족농으로 전환하였다. 진바오유 지역에서는 1979년 가을에서 1980년 봄까지 98%가 가족농으로 전환되어 있었다.¹³

1970년대 말의 권력 이행기가 농민들의 가족농 실시에 도움이 되었다. 1976년 모택동의 사망을 계기로 중국 농민들은 새로운 방식의 가족농화를 시도하였다. 권력이행기의 작은 정치적 이완기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기회를 재빨리 움켜쥐었던 것이다. 중앙에서 권력엘리트들이 권력투쟁을 하는 사이 농민들은 포산도호제를 강행하였다. 정치지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을 때 농민들은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개혁과 지도자들조차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족농제를 반대하였다. 1980년 6월 조자양의 연설은 가족농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1982년까지 등소평도 농가책임제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족농제를 시

¹³ Ibid., p. 64.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6년 산시 지방을 조사한 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의 농민들은 가족농이 합법화된 줄도 모르고 가족농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농민들의 투쟁 끝에 드디어 1983년 1월 포산도호제는 합법화되었다. 등소평이 가족농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서 높은 생산성을 올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가족농을 지지함으로써 자기의 개혁적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하였다. 즉, 등소평은 가족농제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합법화에 기여한 셈이다. 개혁파 지도자들은 가족농이 높은 생산성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가족농을 자신들의 개혁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던 것이다.¹⁴

가족농제가 시행되자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농민들은 잉여생산물로 장사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의 장사는 농촌의 농민시장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농촌과 도시의 상업화를 주도하였다. 도시지역의 상업화 과정도 관련 간부들에 대한 뇌물 공세로 이루어졌다. 호구제도에 의하면 농촌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할 수도 없고 도시에 거주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농민들이 뇌물의 수단으로 간부들을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농민이 도시지역에서 농산물 상점, 식당, 술집 등의 유통과 서비스업을 모두 장악하였다. 도시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사회보장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 농민들은 급격히 자본주의혁명을 주도한 셈이다. 모택동이 농촌이 도시를 포위한다는 전략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였는데 이번에는 농민들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자본주의화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⁵

농민이 주도한 향진기업은 농촌에서 공업발전을 주도 하였다. 중국 정부의 사기업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향진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¹⁴ Ibid., pp. 69-70.

¹⁵ Ibid., p. 170.

요인의 하나는 괘호(掛戶, Guahu)라 불리는 것으로서 사기업에 대한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어서 사용한 것이다. 사기업을 공기업으로 위장한 것이다. 모든 향진기업은 괘호를 사용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지방정부와 지방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결탁한 것이다. 권력과 돈의 상호 공생, 결탁이다. 이로써 지방 간부는 향진기업의 통제자가 아니라 의존자로 되었다.¹⁶ 1994년에는 향진기업이 중국공업생산의 5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중앙정부가 눈치를 채지 못한 사이에 중국 농민들은 중국사회의 경제, 사회, 정치를 바꾸어놓았다.

요약컨대 중국의 개혁개방은 농업부문에서 시작되었고 농민들의 주도적 역할이 정책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개방 정책은 등소평의 주도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가족농으로 특징지어지는 내부체제의 개혁은 농민이 주도한 것이다. 농가책임제를 도입한 것, 토지 사용권을 사유화하는 조치, 생산물을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농민들의 불법적인 주도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국가가 묵인하면서 정책화된 것이다.¹⁷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던 국가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허용해준 것이다.

베트남의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의 도입이 유사한 예이다. 베트남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도이모이를 채택하기 이전에 베트남, 특히 남부베트남 농민들은 이미 도이모이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으로 부터 형성된 개인주의와 암시장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78년에 큰 홍수피해로 남부가 기아선상을

¹⁶ Ibid., p. 122.

¹⁹ Daniel Kelliher, *Peasant Power in China: The Era of Rural Reform, 1979~1989*, p. 233.

벗어날 수 없을 때 인민들이 비공식부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든 상황 하에서는 협동농장이 유지될 수도 없었다.¹⁸ 이러한 상황을 맞은 베트남공산당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토론하였고, 사유화를 향한 인민들의 모티베이션이 확인된 이상 사회주의 사회내의 사적부문을 양성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산화 이후의 사회주의적 양식으로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되었고, 숙고 끝에 베트남 공산당이 내린 결정이 1986년 시작된 도이모이 정책이었다.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가족제생산양식과 유교적 노동윤리가 만나면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감당하기 힘든 사유제에의 모티베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모티베이션의 힘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출로를 열어주자는 것이 시장경제의 도입이다.¹⁹

전경수에 의하면 도이모이가 채택되기 이전과 이후의 베트남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공적 부문이라기보다는 사적 부문의 공이 더 큰 것이고 사적 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정신은 베트남인들의 강렬한 성취동기라고 한다. 성취동기가 강한 사회의 장점은 개인들간의 경쟁의식이다. 베트남정부는 국민의 성취동기와 경쟁의식을 잘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이모이라는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적부문의 발달이 정부로 하여금 도이모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강한 압력이며 원인제공자가 되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적 부문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인 호치민시가 베트남 쇄신의 사실상 진원지가 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취동기가 강하고 경쟁의식이 강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서 사적 부문의 팽창은 결과적으로 공적부문의 통제를 거부하는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²⁰

¹⁸ 전경수, 『전경수의 베트남일기』 (서울: 통나무, 1993), pp. 309-312.

¹⁹ 위의 책, pp. 44-45.

²⁰ 위의 책, p. 187.

1975년 사이공함락 이후 10년 동안 유지되었던 강력한 경찰력의 통제가 더 이상 베트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고, 베트남 국가건설의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 도이모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전경수의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도이모이의 사회적 동력을 적절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수의 『베트남 일기』는 베트남에서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간에 이루어진 공생과 결탁관계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가령, 꽃장사와 경찰의 공생관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시장주변의 가득한 가게들로부터 길가에 너무 깊이 진열된 물건들을 단속하는 경찰차들이 다닌다. 경찰차에는 정복과 사복이 함께 있고, 길을 가득메운 꽃장사에게는 사복경찰이 차로부터 내려와 귓속말로 무어라고 말을 하고 상인은 웃으면서 돈을 건네 준다. 또 한쪽 편에서는 붉은 색 짚차에 군복같은 것을 입은 경찰이 탔고, 그들 중에서도 사복을 입은 사람이 많은 물건을 길에 내놓은 상인에게서 돈을 받아간다. 대목인 모양이다. 비공식부문에 기생하는 공식조직원들이다.²¹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베트남정부가 도이모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공식조직이 그 조직원들을 책임 있게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도이모이 정책의 형성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베트남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해 낸 사회적 동력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성장해서 사회적 현실이 된 비공식 부문을 공식화하려는 정책이 바로 도이모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컨대, 중국과 베트남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개혁정책이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

²¹ 위의 책, pp. 64, 166.

서 농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에서 변화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도농간의 차별정책과 간부에 대한 적대감이 결국은 농민들의 의식화를 가져왔다. 현재의 체제는 철저히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족이 농사의 주도권을 잡는 가족농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식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둘째, 의식화된 농민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전체주의에서 무모한 방식인 조직적 저항이 아니라 SULNAM²²의 전략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뇌물이 혁명을 대신하여 조용하게 밑에서부터 체제변화를 주도하였다.

셋째, SULNAM의 전략이 가능하였던 것은 간부들이 뇌물과 결탁할 만큼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간부에 대한 뇌물공여로 제도권의 통제를 무너뜨리고 체제의 개혁을 야기하는 비법적인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농민들은 혁명 대신 뇌물을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뇌물을 통하여 가족책임제, 즉 농업의 사유화를 쟁취하고, 시장을 형성하였고, 도시에 유입하여 식품, 식당 등 서비스업을 장악하여 광범위한 수요를 창출하여 체제변화까지 수반하였다. 간부들의 뇌물수수 성향을 활용하여 사회주의체제를 해체시킨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사회 변화의 동인을 이해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에서 번성하고 있는 지하경제는 비사회주의의 현상으로 규정되어 당국의 집요한 단속의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되지 않고 확산된 것은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다. 첫째, 뇌물을 중심으로 결탁한 상인과 간부의 공생관계 때문이다. 북한에서 “고이면 움직인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학의 제2 법

²² Spontaneous, unorganized, leaderless, non-ideological, apolitical movement

칙'이라고 불리면서 주민들에 의하여 삶의 지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²³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체제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이므로 뇌물을 사용하여 간부를 회유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중국, 베트남, 북한은 공통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로서 법치사회가 아니라 인치사회이기 때문에 뇌물을 통한 인맥 형성으로 관료주의의 벽을 넘기가 가능한 사회이다.

둘째, 중국의 농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체제에서 버림받은 계층이 많다. 북한의 농민도 농노처럼 농촌과 토지에 구속되어 있으며, 도시의 '복잡계층'도 체제에서 배제되어 있다. 체제에서 소외된 계층은 체제에 통합하여 체제에서 장려하는 가치의식을 추구하기 보다는 체제일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지하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돈이나 버는 것이 그들의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중국의 농민과 마찬가지로 북한 도시지역의 복잡계층들은 변화의 씨앗을 잉태한 모순적 집단인 셈이다.

²³ 천은정(경제학 교수, 2002년 3월 탈북)의 증언.

7·1조치의 배경

7·1조치의 본질이 지하경제를 합법화하여 시장경제 지향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사회 부문도 그에 상응하여 변화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7·1조치가 일어난 배경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7·1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지하경제를 번성하게 한 요인, 즉, 일반주민들과 하위간부들의 시장지향적 가치의식과 행위양식을 변화시킨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치의식과 행위양식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암시장 경제는 단순한 경제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국에서 ‘비사회주의’ 행위라고 규정하여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를 감행하는 것은 경제행위를 넘어선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신과 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당국이 7·1조치라는 정책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게 한 요인, 즉, 암시장경제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하경제 성행의 배경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나 암시장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의 암시장은 중공업위주의 경제였기 때문에 생필품이 부족한 데 따른 보완적인 성격을 가졌다. 북한에서 초기에 농민시장이 형성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점차 암시장이 번성하게 된 것은 경제난 때문이다. 경제난이 암시장을 번성하게 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인 셈이다. 그 외에도 공식경제에서 이탈하여 암시장 경제를 발달시킨 동인이 많다. 소외집단(복잡계층, 적대계층)의 기존체제에 대한 반발심과 가치관 변화, 간부들의 뇌물 수뢰 등이다.

가. 경제난과 체제응집력 약화

경제난은 일반주민과 간부 모두에게 체제응집력을 약화시켰다. 체제통합에 대한 물질적 보수를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경제부문과 정치 및 사회문화 부문은 상호 조응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경제부문의 쇠퇴가 정치 및 사회문화 부문의 쇠퇴를 수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경제는 중앙계획경제 체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의 결정론적 기능이 매우 높은 편이다. 사회주의적 통치 체제의 두 가지 기둥은 중앙계획경제 체제와 당조직인데 경제는 당조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자금을 대는 부문이다. 중앙계획경제체제는 당조직 내에서 충성과 규율을 관리하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당조직 통치의 경제적 토대로써 기능을 한다.²⁴ 중앙정부는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당조직의 정치적 위계

²⁴ Daniel Chirot, "What Happened in Eastern Europe in 1989?," in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The Revolutions of 1989*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p. 4.

에 따라 물질적 혜택을 달리하고,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직책을 할당해 준다. 공산당의 권력과 권위는 생산수단에 대한 당의 소유권과 재화 및 직업 배분에 대한 독점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중앙계획경제의 기능이 쇠퇴하면 하위 관료와 인민 대중의 행위양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왈더²⁵는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체제 변화는 중앙계획경제체제와 당조직의 통치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헝가리와 중국의 경우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왈더에 의하면 중앙계획경제 체제의 쇠퇴는 자원 획득과 출세 기회의 배분체제를 바꾸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야기 시킨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정권의 건강성은 당기구의 규율과 응집력 및 조직화된 정치적 저항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그런데 만약 경제가 부실하여 당 국가기구의 규율과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쇠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당 간부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나 배급이 작아지거나 중단되면, 배급에 의존하던 시민들에게 암시장 또는 시장과 같은 욕구충족의 대안적인 통로가 생기게 되어 당의 규율과 응집력은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당간부가 그들의 욕구충족을 시장기구와 시민들에게 결탁하는 구조로 변화할 때는 더욱 약화되는 것이다. 즉, 강력한 중앙통치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²⁶

경제난은 당조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경제난은 일반 주민들에게 미치는 타격이 매우 즉각적이며 치명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경제난이 체제의 여러 부문에 파괴적

²⁵ Andrew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²⁶ *Ibid.*, pp. 5-7.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만만큼 그 영향력이 직접적이거나 더 파괴적이지는 않다. 자본주의 시장제도에서는 개인들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데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보다는 훨씬 큰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지난 50년간 쌓아올린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을 급속히 침식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10년간의 북한 변화는 김일성 생전 동안 구축한 북한체제의 원형을 침식한 연대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난은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정치교육과 물리적 통제를 통하여 구축한 사회주의체제를 급속히 침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으로 국가의 배급능력이 떨어지자 일반주민들은 암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간부들은 뇌물에 의존함으로써 급속히 체제의 기울을 무너뜨리고 물질적 만족을 위한 대안적 의식과 행위양식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나. 불만세력의 가치관 변화 주도

북한에서 1957년부터 시행한 성분차별정책은 체제에서 배제된 불만세력을 양산하게 되었고 그들 불만세력이 아래로부터의 체제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체제 내부에 잉태한 변화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이 연안파 및 소련파 등 반대파 엘리트들을 숙청한 이후 1957년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민 전체를 상대로 출신성분과 사상경향을 조사하여 혁명을 지지하는 자와 혁명을 반대하는 자, 즉 정권을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가려내서 적과 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주민의 사회성분을 기준으로 믿을 수 있는 층과 믿을 수 없는 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유사시 김일성을 절대적으

로 지지할 핵심세력과 동요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 그리고 유사시 적대세력으로 전환 가능한 계층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북한은 이 사업을 통해 김일성 정권에 대한 저항세력과 농업협동화 정책에 대한 반대자, 6·25동란 당시 반당행위자 등과 그의 가족 약 300여만 명을 불순분자로 분류하여 추방시키고 주거제한을 실시하였다.²⁷

두 번째 더욱 본격적인 성분분류 정책은 1964년부터 1967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다.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전민무장화 정책 실현과 관련하여 주민들 속에서 반혁명적 요소들을 더욱 철저히 가려내고자 하였다. 전쟁이 났을 때 무기를 들고 싸울 자와 처치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놓자는 것이었다. 1971년 2월 1일 노동당비서국이 하달한 『인민분류목록』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계층과 51부류로 구분되어 있다. 핵심계층에 속하는 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북한정권을 지지할 핵심을 이루는 층이고, 동요계층은 유사시 북한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층의 사람들이다. 적대계층은 김일성 정권을 거부하여 잠재적 반혁명분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이다. 1971년 당시 중앙당집중지도 및 주민등록사업의 결과 51계층 구분에 따른 북한주민의 계층구성은 핵심계층이 약 87만 가구에 391만5천 명, 동요계층이 약 70만 가구에 315만 명, 적대계층은 약 173만 가구에 793만5천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²⁸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을 합친 복잡계층의 숫자는 당시 북한인구의 절반을 넘었으며 적대계층만 전체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북한에서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으로 낙인이 찍히면 북한의 시민권

²⁷ 북한연구소, “북한의 계급정책,”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서울: 한울, 1987).

²⁸ 『内外通信』, 22호 (1977).

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이 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간부 직 등용 등 주요 경력의 관문마다 배제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계급적 출신의 배경에 근거하여 일단 낙인이 찍힌 사람은 체제에서 출세를 할 수 있는 희망을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은 주변의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로부터 낙인자로 경원시 당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북한에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의 성분 분류에 의한 차별 정책은 실제로 사회적 차별정책으로 기능하였다. 핵심계층을 제외한 계층은 당원이 되기가 어렵다. 북한에서 비당원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학 진학에서 학교와 전공에서 차별당하며, 간부로 등용되기 어렵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자신은 반동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유지되고 체제로부터 이탈된 사람이라는 정체감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당국의 통제정책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으로부터 낙인찍힌 사람들은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체제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사상을 개조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체제에 적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낙인이론이 시사하는 대로 한번 정치적으로 낙인찍힌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적대세력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 북한의 성분분류정책은 북한사회를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열시키고 적대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한으로 귀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계층(동요계층과 적대계층) 출신이다.

북한체제에서 공식부문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일단 공식부문에 위기가 왔고 공식부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별 혜택이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하자 복잡계층의 사람들은 즉각

태도를 바꾸어 비공식부문으로 발길을 돌린 셈이다. 당국의 통제의 대상이 된 비사회주의 행위인 암시장에 먼저 뛰어들어 새로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복잡계층들이다. 중국에서 도농간의 차별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가족농에서 개혁적 돌파구를 찾아서 돈벌이에 나섰던 것과 유사하다.

북한에서 당원 등 핵심계층들이 체제위기 상황에서도 체제 내에 묶여있을 때 복잡계층들은 즉각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변화의 씨앗을 체제내부에 잉태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 집단이 가치관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이들 중에는 대체로 기본군중의 일부와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되어 신원문건에 낙인찍힌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출세하기 보다는 장사를 하여 돈이나 버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즉,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경제적으로 남 못지않게 사는 것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쉽게 가치관을 전변시킨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안전원, 보위부원 등 단속요원과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단속요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주어 매수하기도 하며 그들에게 장사용으로 쓰는 오토바이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비사회주의그루빠 등 새로운 단속반이 등장하면 처음에는 그 조직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 수그러들다가 일단 그 조직의 성격과 사람을 파악하자마자 이들을 매수하여 다시 또 암시장 장사를 계속한다고 한다.

중국의 사회 변화는 농민이 주도하였으나 북한의 사회 변화는 도시노동자가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사회 변화는 농민들이 농업의 생산잉여를 도시지역에서 장사를 하여 도시부문을 상업화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우는 도시노동자

들이 생산 없이 외부에서 들여온 물건을 유통하여 이윤을 얻는 지대 추구 행위(rent-seeking)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다. 간부들의 부패와 뇌물

관료적 통제가 엄격한 북한에서 주민들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통제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통제의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반체제 조직을 형성하여 집단행동을 통한 변화를 이루어내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중국의 농민들처럼 북한의 주민들은 간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관료통제의 장벽을 넘은 것이다. 장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간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조직을 이탈하여 장사를 하는 채널을 개발해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과정에서도 통제하는 요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장사를 계속하는 ‘허락’을 받아낸다. 뇌물을 받으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안전원들은 검열이 있는 날에는 “오늘 검열 나왔으니 팔지 말고 들어가라”고 귀뜸하여 준다고 한다. 군부, 당, 보위부, 안전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 암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준다고 한다.

중요한 변화의 동인은 북한 간부들의 부패이다. 경제난 속에서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의 행위양식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비사회주의적 지하경제에 결탁하여 개인적 사리 추구에 몰두하는 경향이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이 광범위하게 뇌물수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입당, 대학 입학, 직장 배치, 주택 배정, 여행증명서 발행 등 대민업무에서 당, 행정관리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뇌물이 매개되어 있다고 한다. 심지어 기차표 판매원까지도 뇌물을 받고 기차표를 팔며, 기차에 여행객의 짐을 실어주는 짐꾼까지도 뇌물을 받아야 여행짐을 기차에 실어준다고 한

다. 뇌물 없이는 되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배 엘리트들은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음으로써 음성소득을 올리고 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뇌물수수,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동원이 가능한 연줄망을 활용한 사익 추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북한에서 간부들의 뇌물이 만연하여 사형선고 받은 자도 뇌물을 쓰면 살아남으며 처벌을 당하는 사람은 뇌물을 줄 능력이 없는 약한 자들이라는 인식도 팽배하고 있다.²⁹

북한에서 간부들은 내 손에 풀기가 있을 때 즉, 권력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이 있으면 현재뿐만 아니라 간부에서 떨어졌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축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더욱 성행하고 있다. 중간층 간부(각 도·시·군·구역지도원, 정무원 부부장, 중앙당 과장)들은 북한 체제에 문제가 많고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의 이윤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 많으며, 권력층 내에는 남한에 의해 통일될 경우를 대비하여 “살아남으려면 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등의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등 부정부패가 심하다. 공식적 직위에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부패에 참여함으로써 음성적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³⁰

북한의 간부들에게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 관직이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예를 얻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둘째, 권력자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법으로 모든 것이

²⁹ 김난희(양강도 혜산시 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년 10월 귀순)의 증언.

³⁰ 임복신(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년 10월 귀순)의 증언.

결정되는 법치관료주의 사회가 아니라 최고권력자의 독재에 의하여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체제이며, 하부단위도 마찬가지로 단위기관의 책임자가 재량권을 많이 가진 체제이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의 사회이다. 따라서 권력자의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은 체제이다.³¹

셋째, 남한의 언론과 같이 비리 간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매체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비리사건이 고발되더라도 당국의 보이지 않는 채널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리는 고발되거나 지적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³²

넷째, 집단주의를 체제의 원리로 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간부와 일반 대중 차이 없이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로 작동하는 체제원리 하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세밀하게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 이기주의가 오히려 발달하게 되는 배경이다. 이 이기주의적 성향이 간부에게는 부정부패를 낳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에서 뇌물수수가 성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뇌물수수의 새로운 장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식량구입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친척집 방문이나 장사 목적의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행중 발급은 담당 당간부, 안전부의 새로운 먹이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이탈하고 식량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의 출퇴근을 단속하는 관리들에게도 새로운 먹이감이 만들어진 셈이다.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는 사유서를 제

³¹ Wista Suraska, *How the Soviet Union Disappear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p. 120 참조.

³² 소련의 사례를 보기 위하여 Scott Shane, *Dismantling Utopia: How Information Ended the Soviet Union* (Chicago: Elephant Paperbacks, 1994)를 참조할 것.

출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가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간부들의 새로운 뇌물꺼리가 되는 셈이다.

북한의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직장을 이탈하는 사람이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장사꾼들에게 뇌물을 받고 묵인하고 보호하여 주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거대한 체제변화의 동인이 된 암시장이 발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뇌물을 통하여 공조직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뇌물을 통하여 불법적인 장사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뇌물을 통하여 통제를 담당하는 간부들을 암시장 체제에 결탁시킬 수 있었다.

뇌물이 혁명을 대체하여 북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뇌물로 가능하게 된 암시장의 발달이 북한사회, 북한체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뇌물이 광범위한 체제 침식 현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시대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건설 했던 시기라면 김정일 시대의 10년은 암시장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체제의 원형을 해체시키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지하경제의 합법화 배경

북한 당국이 7·1조치라는 정책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직접적 요인, 즉, 암시장경제를 합법화하게 된 배경은 북한내부에서 7·1조치를 설명하는 강연 자료와 『조선신보』 등 북한측 자료에 잘 나타나있다.

가. 공식경제의 붕괴와 암시장의 번성

북한에서 암시장 경제의 발달은 7·1조치와 종합시장 신설에 이르기까지 체제를 변화시키는 주도적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에서 암시장이 어떻게 사회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협동농장 농민들이 자기 텃밭에서 나온 농토산물을 파는 농민시장이 있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자 농민시장에 농민들 이외의 주민들이 진출하여 농산물이나 다른 공업제품을 팔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신보』는 국가가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조건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평가하였다.³³ 『조선신보』는 농민들 이외의 주민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사실상은 북한의 전 주민 중에서 농민들과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으며, 1995년 이후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장사해서 먹고 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공식경제가 붕괴되자 생산과 유통이 모두 암시장 경제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우선 생산부문에서 볼 때 일부 공장들이 국가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자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유상 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생산을 하게 되었다. 가령, 신발공장이 원자재가 없어서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 공장을 돌리자니 지배인이 자체적으로 외국이나 외부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생산품을 내었다. 이 생산품을 값싼 국정가격으로 도매소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가격을 받는 암시장에 내다 팔았다. 국가가 허락은 안했지만 기업이 생산비용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것이 시장가격이었다. 암시장의 비싼 가격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7·1조치가 이루어지기 10여 년 전부터 이런 식이 시행되고 있었다.

³³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북한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의 종착점이 7·1조치이다. 7·1조치는 기존의 암시장의 관행을 합법화해준 것이다. 물가를 시장가격으로 인상하고 공장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서민들이 자구책으로 개발해 낸 지하경제의 삶의 형식을 국가가 양성화해준 것이다.³⁴

유통부문의 지하경제도 경제난에서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배급 제도가 흔들리면서 북한주민들이 암시장으로 몰려나와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면서 급작스럽게 변성하게 되었다. 1990년대 북한경제의 계획 메커니즘이 마비되기 시작한 이래 국영상점 혹은 배급소에서 물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비공식부문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국정가격이 농민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국가물자들을 무더기로 빼내어 암시장에서 비싸게 파는 방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암시장은 변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7·1조치 관련 북한 내부 자료는 장사행위가 성행하여 국가에는 상품이 부족하나 개인들에게는 상품이 쌓여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았다. 농민시장에 가보면 쌀을 비롯한 식료품으로부터 공업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품이 다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차 부속품과 국가적인 주요 원자재들까지도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액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고까지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면서 달러화는 중요한 교환수단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북한의 비공식부문에서 통용되고 있는 달러화의 규모는 6억~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다. 이러한 암시장의 발달은 개인이 국가의 돈주머니를 털어 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³⁵

³⁴ 서만영(44세, 함북 단천 시병원 의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지하경제가 사회주의에서 체제 변화의 기능을 하는 것은 인민들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권력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정치 및 행정관료들은 비공식 경제영역에서 수입원이 생기면서 비공식적인 경제영역에 기생하여 온존하거나 조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지하경제의 성행은 공식경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킨 것은 경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심화된 지하경제의 성행이 수반한 사회적·정치적 의식의 변화 때문이다.

지하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단기적인 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에 부정적인 기능을 하였음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서 목격하였다. 사적경제영역이 확대되면서 계층간, 집단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에 의존하는 순종적인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제 일탈행위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지하경제의 여파로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집단주의적 가치가 지배적인 가치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도 이제 집단주의적 충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슬로건과 사상 교양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질주의, 소유주의, 배급주의에 기초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의식의 변화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생계를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등의 국가의존적 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될 것으로 인식하던 인식

³⁵ 정연호, “최근 북한의 달러화 사용금지 조치의 배경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02-12월호 (서울: KDI, 2002), p. 9.

이 배급제 공식 폐지 이후에는 경제가 호전되어도 배급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배급제가 폐지되고 장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배급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배급을 타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력갱생의 의식은 장사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은 대부분이 공식부문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길은 장사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장사를 해야 먹고 산다는 인식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로서의 장사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평양의 군고구마 장사와 같이 기업형의 장사가 나타나고, 북한 당국이 종합시장을 설치하는 등의 양성화 조치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7·1조치를 취한 중요한 배경의 하나가 바로 암시장 경제를 억제하여 공식경제와 공식사회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1조치에 대한 당정 지도부와 간부들의 강연 및 해설 자료³⁶에 나타난 내용에서 북한 지도부가 7·1 조치를 취한 의도의 하나는 암시장을 국영시장에 흡수하여 공식부문의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7·1조치에서 의도하였던 이 목적은 실패하였다. 북한 당국이 암시장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7·1조치 시 약속하였던 월급을 주민들에게 주지 못하자 주민들은 다시 암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으며, 월급을 주지 못한 국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북한 당국은 오히려 2003년 3월에는 암시장을 시장으로 양성화하고

³⁶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강연 자료” (평양, 2002).

나아가서 종합시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암시장을 막기는커녕 북한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이행시키는 데 기여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나. 북한주민들의 태업

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되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개인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체제이다. 더욱이 동원된 노동에서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 배급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지위와 연령에 따라서 배급량이 정액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개인이 열심히 노동을 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유인동기가 없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인 범죄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태업이나 사보타지를 하는 등의 의식적 노동기피도 일어나고 있다.

7·1조치의 목적의 하나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공식부문 경제에서의 태업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간의 평균주의 분배에 따라 주민들의 생산성 의식은 약화되었고, 정량배급제는 노동의욕을 낼 필요가 없는 제도로 작용하였다. 7·1조치는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일한 만큼 배분해 결과적으로 놓고 먹는 분위기를 없애자는 의도이다.

『조선신보』는 7·1조치에 관한 보도의 타이틀을 “창조의욕 더욱 발양시키는 계기”라고 썼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창조적 의욕을 발양시키는 것이 근본 목적임을 알 수 있다.³⁷

7·1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교양자료에 7·1조치가 취해진 배경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³⁷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지난시기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바로 실시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공짜와 평균주의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그것이 사람들속에 건달풍을 조장시키고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떨어뜨리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국가예산에서 적자가 계속 생겨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시책들도 바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명령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주의로 변화된 주민들의 작업태도를 극복하고 노동동원을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임금체계는 현물배급제로서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무상에 가까우며 이 무상배급제도 하에서는 일하지 않고도 1인당 정액의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 때문에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를 못 느끼었으며 노동생산성은 정체되어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의 하나가 주민들과 간부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김일성의 “사업작업에서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본위주의를 타파”등의 말이 그 예이다.

일군들속에서 사업을 눈가림식으로 실속없이 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아니라 당과 혁명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사업을 형식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걸치레로 발라맞추는데 버릇되고 건달풍에 물젖게 되며 나중에는 당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을 하는 것과 같은 혁명가답지 못한 현상들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³⁸

³⁸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05.

분배의 평균주의 배제를 강조한 김정일의 관련 정책 지시내용 (2001.10)에서 7·1조치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 사회주의 노동생활의 기풍을 확립해 건달을 부리거나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켜야 한다.
- 물질적 평가에 정치적 평가를 잘 결합시켜 노동량과 질이 높은 사람은 물질적 정치적으로 응당 평가를 받게 하며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 현실의 변화발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분배방법을 연구 도입해서 사회주의 노동보수제를 더욱 개선하고 완성시켜야 한다.
- 경제생활에서 공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고 무상공급, 국가보상 기타 혜택들도 검토해서 없을 것은 없어야 한다.

김정일 지시내용의 핵심은 지금까지 국가가 공짜로 주던 제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짜로 먹여주되 열심히 일하도록 사상적으로 독려하던 제도가 작동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놀고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현물 배급제는 연령에 따라, 필요에 따라 1인당 정량의 현물배급을 받는 제도로서 김정일이 지적한 대로 ‘평균주의 분배’ 방식이다. 7·1조치는 평균주의를 지양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배급을 주던 것을 ‘자기가 일한 만큼’ 화폐임금으로 지급하여 국영상점에서 구매하도록 한 조치이다. 가게에서 수입과 지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전문 계간지 『경제연구』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이 잡지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의 ‘평균주의 분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건달(계으름)을 부리는 사람에게 다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늘고 먹거나 쉬운 일을 하려는 건달풍을 조장시킨다고 비판하였고, 특히 “공짜를 없애는 것은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과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³⁹ 즉 과거에는 노동의 양과 질을 묻지 않았고, 물질적 평가보다는 정치적 평가를 중요시한 잘못을 시인한 셈이다. 또한 7·1조치를 통해 평균주의와 공짜를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과거 국가 예산 중 74%가 공짜로 나가는 뭇이었다고 이의 척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⁴⁰

생계수단을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수입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유사한 관찰이 박재규 전통일부장관의 방북 조사에서 이루어졌다. 2002년 9월 KBS와 북한 합동연주회에 동행했던 박재규는 방북기간 동안 접촉했던 고위급 인사들과 집중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북한 관리들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⁴¹

북조선 성립이후 인민들이 초기에는 열심히 일하였으나 점차 게을러졌다. 농민, 광부, 어부 할 것 없이 모두 게을러졌다. 노동생산성이 아주 침체되었다. 매년 새해 시작시에는 엄청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연말에는 모두 가짜 허위보고로 끝났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모두 똑같이 분배받았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것이 북한의 병이다. 이 병을 치료하고 생산

³⁹ 『연합뉴스』, 2003년 7월 9일.

⁴⁰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담화 2001년 10월 3일).”

⁴¹ 박재규, “6·29 서해사건 이후의 남북관계,” 통일IT포럼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2002.9.23).

성을 올리기 위한 조치가 이번의 조치이다. 김정일의 명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 채택된 조치가 7월 1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이처럼 북한의 7·1조치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태업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개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국가재정의 고갈

7·1조치가 취해진 또 하나의 배경은 국가의 재정확충을 위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그 동안 식량뿐 아니라 공업부문에 대해서까지 높은 수매가, 낮은 판매가 정책을 취해왔으나 경제난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북한 관리들이 평양의 외교관들에게 경제개혁 조치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경제개혁의 목적은 국가의 지원규모를 줄이고 물가와 임금이 실질가치를 가지며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우 정확한 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²

북한의 7·1조치 강연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적으로 공짜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출이 급감하게 된다.

국가예산에서 비생산적인 지출이 생산적 지출보다 더 많았으며 그 가운데서 공짜로 나가는 몫이 무려 74%나 되었다.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에만도 한해에 수십억원이 넘는 돈이 국가부담으로 지출되어 왔다. 돌격대원들에게도 그들이 한달에 자기 생활비의 40%정도밖에 벌지 못하지만 나머지 60%의 생활비를 매달

⁴² “경제개혁 외국에 공식홍보하는 북한,” 『연합뉴스』, 2002년 7월 31일.

국가가 보장해 주고 매일 식비와 러비, 이동작업보조금까지 공짜로 주었다. 해마다 여기에 지출되는 돈만 해도 1억 수천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철도일군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까지도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여행하였다. 그밖에 무슨 가급금이요, 간식비요, 관람비요 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공짜로 나가는 돈이 매우 많았다. 이달부터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수매한 식량값에 일정한 부가금을 붙여 지금의 식량공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팔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이 50%정도 된다. 지난 시기에는 출장을 가면 량표 1장에 부식물값만 내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출장자들이 그 어디에 가든지 쌀값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누구나 자기가 일한 노동의 결과에 따라 번 것만큼 먹고 사는 가장 공정한 사회제도이다.

국가의 재정고갈은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무력화시킨다. 대안의 사업체제란 국가에서 공장·기업소에 예산과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국가가 더 이상 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업의 자체 경영을 통한 생산활동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관리방식이었던 대안의 사업체제는 중앙정부가 기업소에 원자재와 인건비를 공급해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결국, 개별기업이 생산의 계획, 원자재 확보, 배분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오던 독립채산제가 완전히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경제난속에서 국가가 더 이상 이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존의 역할을 포기하고 각 기업과 개인이 자력갱생하도록 한 조치인 셈이다.

라. 대량아사 사태의 충격

북한에서 1990년대 말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과 대량아사 사태는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말에 아사자가 길가에 널린 정도로 대량아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것을 수습관할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당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시신을 수습할 트럭도 없어서 개인이 장사하는 리어카를 차출하여 하루에 3번씩 치웠다고 한다. 신분도 확인하지 못하고 트랙터에 실어서 큰 구덩이를 파고 묻었는데 이를 ‘직파현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990년대 말의 아사자 수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북한 당국의 통계 작성에 참여한 한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아사자 숫자가 대략 드러난다.

2000년 9월 27일 교시에 따라 927 상무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에 서만영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당에서 1명, 인민위원회에서 1명, 보건부에서 1명, 사법검찰에서 1명, 의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당시 통계를 집계하였다고 한다.

탈북 의사에 의하면 아사자 수가 약 18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북한 행정구성은 인민반 리·동, 군·시, 도, 중앙으로 나누어져 있다. 1개 세대는 4~5명(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30세대가 1개 인민반을 구성하며, 20~30개 인민반이 1개 리·동을 구성하며, 20~30개 리·동이 1개 시·군을 구성한다.

그런데 당시 통계에 의하면 1999년 1년에 평균 1개 리·동에서 90명이 아사하였다고 한다. 1개 리·동의 인구는 2,000~3,000명인데, 1개 리·동에서 1년에 90명이 사망하였다면 사망률은 적게 잡아 $90/3,000\text{명}=3\%$ 가 된다. 북한 인구를 2천만으로 볼 경우, 아사자가 많았던 1996년, 1997년, 1998년 3년간의 사망자수는 대략 180만 명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20,000,000x0.03x3).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가 1990년대 말 3년간에 사망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7~8년간 지속되었고 1996·97·98년에 특히 극심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사자 수는 180만 명이 넘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⁴³

북한 당국에서도 인적 손실에 충격을 받고 고난의 행군시기에 “유생역량이 손실”되었음을 강조한다고 한다. 유생역량이란 북한에서 군사용어로 인구를 의미한다. 북한 당국이 대량 아사자 현상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였는지는 다음의 일화가 일부를 보여준다. 북한 정부가 가장 아끼는 집단이 영예군인인데 2000년 김정일이 함흥 영예군인 공장에 현지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동무들이 다 죽은 줄 알았소”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제일 아낀다는 사람들이 굶어죽은 줄 알았다는 것이 현지지도 한 자리에서 김정일의 첫 인사말이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으면서 정부가 대안이 없이는 인민들을 살리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인민이 없이는 국가도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조치가 없으면 도저히 국가경제, 인민생활을 구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려야 정치와 국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북한지도층이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김정일이 한때 장성급 간부에게 행한 발언에서 “나에게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마라”고 했지만 상황이 위급해지자 변화를 시도한 셈이다. 초보적으로 먹는 문제를 향상해야 기업을 살리고,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⁴³ 서만영(44세, 함북 단천 시병원 의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⁴⁴ 박명희(함북 00시 교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7·1조치 이후 경제체제의 변화: 시장사회주의 요소의 확대

7·1조치 이전까지의 북한의 변화가 주로 경제난과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7·1조치 이후의 변화는 국가의 정책적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7·1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관리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조선신보』는 “국가가 격제정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번 개혁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원칙을 기초로 해서 단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화폐에 의한 유통형태를 취하게 되어도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를 둔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7·1조치에 대한 공식적 해석은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개선하느냐, 계획경제를 개선한다면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식입장은 ‘실리사회주의’이다. 그런데 실리사회주의를 하고 있다고 정당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사회주의’⁴⁵를 향하여 변화하고 있다. 실리사회주의는

⁴⁵ ‘시장사회주의’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 VI장을 참조.

곧 시장사회주의인 셈이다. 북한의 변화과정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사회주의와 유사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 절에서 논증하고자 한다. 시장사회주의가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에서의 의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VI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장사회주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북한 당국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주목할 만하다. 2003년 11월 6일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대표단장이 주고받은 대화의 한 대목이다. 우리측 김광림 대표단장이 “북에 시장이 들어섰으니 시장에 경제를 붙여 시장경제로 부르자”라고 말한데 대하여 북한 최영건 대표단장이 “그건 안 된다, (북의 변화는) ‘시장사회주의’다”라고 응수하였다고 한다.⁴⁶ 실제로 7·1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시장사회주의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7·1조치 이후 양성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된 시장사회주의적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1. 계획체제의 부분 해체와 시장요소의 도입

북한에서 경제난 이후 생산부문과 유통부문에서 모두 계획체제가 상당부분 해체되고 시장 요소가 확산되었는데 7·1조치를 계기로 이를 양성화하게 되었다.

⁴⁶ 『중앙일보』, 2004년 7월 4일.

가. 생산부문의 시장요소 도입

(1) 대안의 사업체계의 붕괴

7·1조치는 민간경제 생산부문에서 기존의 계획체제의 경제관리 방식이었던 대안의 사업체계를 사실상 폐지하고 시장제도 중심의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을 도입하였다. 북한이 7·1조치를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⁴⁷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핵심적 제도로서 기업소에 대하여 원자재를 공급하고 기업소 종업원에 대한 후방공급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고갈로 배급제가 붕괴됨에 따라 기업소 종업원에 대한 후방공급체계가 붕괴되었고, 기업소에 원자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안의 사업체계는 1990년대 들어서 사실상 무너졌다. 국가의 역할을 암시장이 대체하고 있었다. 7·1조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붕괴된 이후 암시장체제를 기정사실화하여 양성화하는 조치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7·1조치는 북한 당국의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필요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양성화된 것이다. 7·1조치는 당국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창안한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도입된 제도로서 이전의 지배인 단독 책임제를 관료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당조직을 기업에 침투시켜 기업경영을 당이 장악하도록 한 것이다. 농업의 청산리 방법에 유사한 공업의 관리체계로 도입된 것이다. 사실상 경제를 당이 관리하는 것으로서 공장·기업소 단위에 당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책임비서가 기업의 생산관리를 최종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당위원회가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최고실권자는 당비서이

⁴⁷ 박명익(함북 00시 교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기 때문에 사실상 당비서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의 사업체제는 과거 기업이 개별적으로 자재를 구입하던 제도를 없애고 자재공급을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근로자 생활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는 후방공급체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안의 사업체제는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기업관리 체제이다. “위가 책임지고 아래를 도와주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당이 기업의 경영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안의 사업체제 하에서 당일꾼이 기업관리를 주도하고 경제일꾼은 자재확보 및 후방사업을 담당하는 등 기업경영의 뒤로 밀려났다.⁴⁸ 북한에서 직장배치 시 경제전문가를 지배인으로, 김일성고급당학교를 졸업한 경제를 모르는 정치일꾼을 공장당위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사실상 정치일꾼이 경제를 담당한 셈이 된 것이다.

원래 당조직은 정치적 지도를 하고 지배인은 생산관리 사업을 하도록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사업의 일선 현실에서 키잡이 역할과 행정대행역할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당이 행정기관의 일을 도맡아 하는 행정대행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김일성은 당조직과 당일꾼들이 해당조직을 움직이지 않고 모든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음을 자주 지적하곤 하였다. 공장당위원회가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틀어쥐고 통제하기 때문에 공장지배인들이 독자적으로 자기사업을 하지 못하고 당위원장이 지배인 대리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이를 행정대행이라고 비판하였다.⁴⁹

이것이 기업소가 경제논리를 상실하고 정치에 종속되게 된 근본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침체하게 된 원

⁴⁸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2), p. 205.

⁴⁹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p. 77.

인의 하나가 된다. 이것이 북한경제난의 한 원인이며 지난 30여년 지속되었던 경제침체의 원인이다. 경제일꾼들은 “당일군 너희들이 다 해먹으라 나는 모른다”라고 불평하면서 기업경영에 무관심하기 일쑤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대안의 사업체계 선전을 40년 넘게 했다. 경제관리에서 가장 우월한 방법이라고 선전하였다. 경제가 무너지는 속에서도 대안의 사업체계를 찬양하였다.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의 공황을 모르는 체계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런 북한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한 선전을 중단하였다. 허물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내놓고 말은 못하고 이 경제 운영방식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5년 이후 북한 경제가 전쟁을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공장에는 기계를 뜯어서 고철로 다 팔아먹었고 탄광에 가면 전기가 없어 갯에 물을 퍼내지 못하여 탄광이 다 무너졌고, 농장에는 트랙터가 없어 폐농이 되었으며, 바다에는 선박을 수리하지 못하여 선박이 다 썩었으니 어느 부문하나 일어설 데가 없다고 한다.⁵⁰

중앙정부의 예산이 고갈됨에 따라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미 1980년대 후반 들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작동이 거의 중단되었으며 개별기업들이 자구책의 차원에서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가동을 중단하고 말았다. 공장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이를 무한정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독립채산제를 확대하여 기업소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개별 공장이 자력갱생에 의한 방식으로 가동 중단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7·1조치의 기업관

⁵⁰ 이상태(신발합작회사 사장, 2002년 8월 입국)의 증언.

리 부문과 관련된 조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역학관계도 변화하였다. 중앙정부가 원자재와 예산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의 지시도 권위가 없어졌다. 그래서 2002년 7·1조치에서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일군은 정치 선동사업에 한정하여 당노선이 먹혀 들어가는지를 감독하는 역할만하도록 변경되었다. 당이 기업경영에 실패하자 지배인에게 떠넘기고 지배인이 노동자들을 먹여살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¹ 그런데 7·1조치로 지배인의 재량권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지배인유일관리체제는 아니다. 당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정치보위기관에서 노동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생산품의 결정권과 생산물에 대한 처분권,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기에서 김정일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나쁘다는 말은 못하고 “추세의 흐름에 맞추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하여 말은 안해도 대안의 사업체계를 부정한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경제일꾼들은 이제 김정일의 머리가 제대로 돌기 시작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판하면 잡아간다고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김일성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 폐기하였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⁵² 7·1조치에서 기업관리와 관련된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가 준 계획을 몇%까지 수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품목을 자유롭게 생산 판매할 수 있다.
- 지배인은 고용을 결정할 수 있고 필요없는 노동력은 쓰지 않을 수 있다.

⁵¹ 이상태의 증언.

⁵² 천은정(경제학 교수, 2002년 3월 탈북)의 증언.

- 지배인은 생산품목을 자체로 결정할 수 있다.
- 지배인은 종업원들을 먹여살려야 한다.
- 당위원회는 당적 지도를 안받침한다.
- 당위원회는 지배인과 손잡고 협력해서 공장 돌리는데 협력하도록 한다.
- 농장에서는 분조단위를 시범적으로 가족단위로 땅 나누어주고 영농하게 한다.⁵³

7·1조치를 계기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 확대이다. 김정일의 2001년 10월의 지시내용은 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공급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계획작성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업소에서 하도록 하였다. 지방경제 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 투자액 등 중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가격제정에서도 지방공업 생산품(주로 소비재)은 상급기관의 감독아래 공장 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재공급체계에서도 생산물의 일부분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였다.⁵⁴

전반적으로 중앙계획을 허물어뜨리는 내용이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계획체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경제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공장·기업소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 사이의 생산소비적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진 조건에서 모든 단위의 구체적인 생산지도를 국가가 계획지도권에 다 포함시킬 수 없으며, 또 그렇

⁵³ 이상태의 증언.

⁵⁴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로부터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중요한 대상, 중요한 지표들의 수행에 집중시키고 공장·기업소들이 국가계획에 따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경영활동을 해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⁵⁵

결국 기업의 자율성 강화는 기업 경영상의 책임감 강화를 수반하였으며, 그것이 7·1조치의 목적의 하나이다. 즉, 기업이 계획수행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업별 처지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과거의 생산 목표량 달성 위주의 경영에서 원가와 이윤을 고려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까지 창발성과 자율성을 갖게 하여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둘째, 기업자율성 확대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기업소 내 종업원들의 임금을 기업소 내에서 자력갱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력 업종 외에 8·3소비품을 생산하여 이를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올려서 종업원의 월급으로 지급하라는 조치이다. 어떤 기업소에서는 시당위원회에서 7·1조치의 내용을 전달할 때 기업소 내의 부업을 통한 기업소 내 식량 자력갱생을 주 내용으로 전달한 곳도 있다고 한다. 2002년 7·1조치를 당비서 및 공장 지배인이 종업원을 집합한 자리에서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해당 공장의 주력상품 이외의 것을 생산해서 종업원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지시하였으며, 지배인 및 당비서가 머리를 짜내서 종업원을 먹여 살리라는 것이다. 공장이 자체로 벌어서 종업원 먹여 살리는 것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이다.⁵⁶

⁵⁵ 김명철, “전반적 생산에 대한 계획적 지도를 집단주의적 원칙에 맞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 p. 15.

⁵⁶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년 7월 18일.

(2) 독립채산제의 확대 실시

7·1조치가 계획경제를 상당부분 해체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기능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부실 연합기업소를 폐지하여 기업별 완전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85년에 산업전반에 확산 시행되었는데 중앙계획경제체제의 골격을 이루는 기업관리방식이다. 즉, 연합기업소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트러스트나 콘체른 같은 기업집단의 형태로서 원료,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소들과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공업생산 유기체로 알려져 있다.⁵⁷ 북한에서 계획 작성 및 계획 이행의 행정체계는 부(성)·위원회 아래에 연합기업소를 두는 체제로서 각 부(성)에서 하달된 생산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합기업소가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계획을 자체로 작성하고 그 수행을 조직·집행한다.⁵⁸

7·1조치를 계기로 부실 연합기업소를 대폭 해체하고 개별기업에 완전 독립채산제를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연합기업소 설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 경제난 때문에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원자재와 인건비를 공급할 능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중앙계획이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별로 자체로 생존모색하고 있으며 개별기업별로 자력갱생하도록 방치되고 있다. 또 한편 개별기업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기업에 기업운영의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공장가동률이 20%이하로 더 떨어지고 말았다.

⁵⁷ 연합기업소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제1형태는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술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결합·조직된 기업이며, 제2형태는 일정지역내 동종기업들과 연관성을 가진 보조 부문의 공장·기업소가 결합·조직된 것이며, 제3형태는 전국적으로 부문별로 전문화된 기업이 결합하여 분업체계를 구성하여 생산 협업을 하는 형태이다. 이상만, 『통일경제론』, p. 103.

⁵⁸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p. 123.

과거 중앙정부의 자재공급위원회와 자재상사가 연합기업소에 공급 하던 자재지원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개별 기업이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원자재 시장으로서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설치하기로 7·1조치에서 지시하였다. 2001년 김정일은 공장·기업소들간 과부족 되는 일부 원자재, 부속품 등을 유무상통하도록 하며,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물자교류의 종류와 범위를 적절히 규정해주고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자재 시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상품자재시장을 신설하도록 했지만 자재시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다. 물자도 없고 투자할 자금도 없기 때문이다. 현실성이 없는 대안인 셈이다.⁵⁹

이러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독립채산제 확대실시에 대하여 김일성의 독창적 사상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2001년도 『경제연구』에는 기업소의 상대적 독자성에 관한 논문 두 편이 실렸는데 박홍엽은 “사회주의 국영기업소들에 경영상 독자성을 주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상 독자성을 부인하고 국가의 유일적 관리밑에서만 운영되게 하겠는가”라고 자문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특성에 대한 전면적 분석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소들의 관리운영에서는 반드시 경영상 독자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셨다”고 지적하였다.⁶⁰

북한의 경제이론지가 밝힌 독립채산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관리와 이용에서 개별 기업소들이 독자적인 단위로 된다는 것, 둘째, 개별 기업소들이 자체로 채산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

⁵⁹ 남중인(인민무력부 국제연합무역회사 원산 지사장, 2003년 3월 탈북)의 증언.

⁶⁰ 박홍엽, “국영기업소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의 사회경제적 기초,”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3), p. 9.

셋째, 국영기업소가 다른 기업소들과의 경제거래에서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⁶¹

이론상으로는 기업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연합기업소에 원자재를 공급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알아서 공장을 돌리고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라는 의미이다.

북한의 경제이론잡지인 『경제연구』는 완전한 독립채산제의 실시가 경제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국가가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넉넉히 대주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에서 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를 적극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물자교류시장을 설치하여 공장·기업소들 사이에 직접 무무상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계획을 수행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수단 유통에 종사하는 조직시장의 면모는 자재상사에 의거한 자재의 계획적 공급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시장을 포괄하는 정연한 물자보장체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밝혔다.⁶² 7·1조치에서 북한은 공장·기업소에 자율권을 주고, 독립채산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여 공장·기업소가 자체상품을 팔고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통신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에서 공장기업소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전에는 중앙집권적 계획 분배로 기업을 관리하였으나, 이제는 개별기업이 자체로 알아서 에너지, 원료, 인력까지 구해서 공장을 돌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공장은 가동이 어렵다. 공장·기업소의 유지전력도 없어서 다 썩고 녹슬

⁶¹ 위의 글, p. 10.

⁶² 리장희,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 유통영역에 대한 주체적 견해,”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1), pp. 23-24.

었으며 유통 상품이 없고 유동자금도 없다.⁶³

7·1조치 이후 국가-기업관계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과거의 중앙계획경제체제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신보』가 지적한대로 “중전에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나라의 몫이었다. 공장·기업소의 부기에 감가상각금이란 말은 있었으나 그 돈은 나라에 납부하였다. 각 단위는 나라가 새로운 설비를 해결해주는 것을 기다리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사회주의 경제관리가 개선되어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을 공장·기업소의 결심에 따라 번수입에서 지출하게 되었다.”⁶⁴

요약컨대 7·1조치는 민수경제부문의 계획체제를 대폭 축소하고 사실상 시장제도가 작동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본과 물자의 부족으로 시장의 작동이 여의치 않다. 둘째,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의 이중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공업, 군수산업 등 가동되고 있는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체제를 유지하되, 가동이 중단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합기업소체제도 해체하고 개별 기업별로 생존의 자구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전면적으로 계획경제를 해체하여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유통부문의 시장요소 도입: 암시장의 자유화와 종합시장의 도입

원래 북한의 상업유통정책은 국가의 공급제였다. 공급제하에서 상점의 기능은 개별 가정에 생필품을 균등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이런 기능이 마비되고 암시장이 대체하게 되자 국영상점에서 시행되던 공급제가 자유판매제로 전환되고 있다.⁶⁵ 7·1조치를

⁶³ 남중인(인민무력부 국제연합무역회사 원산 지사장, 2003년 3월 탈북)의 증언.

⁶⁴ 『조선신보』, 2003년 11월 28일.

전후하여 북한에서는 생산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에서 모두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 첫째, 배급제가 붕괴하자 암시장이 번성하였으며 7·1 조치가 이를 양성화하자 소비재 유통 부문의 시장화가 진전되었다. 둘째, 대안의 사업체계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을 활성화하였다. 하나는 중앙계획기능이 붕괴되자 시장이 대체하게 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연합기업소가 해체되자 개별기업이 독립채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생산재 및 소비재 분야에서 시장화가 촉진되었다. 시장이 국가의 기능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써 시장화는 소비재 유통분야에서 주류를 이루고, 생산 부문에서도 일부 품목의 가내수공업 등 소상공생산 형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전 부문에 시장의 원리가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1) 암시장의 양성화 과정

우선 암시장이 시장으로 양성화되고 종합시장이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자. 7·1조치가 취해진 직후에 장마당의 개인장사 종사자는 모두 국영상점에 물건을 이관하도록 하고 개인장사를 금지했다. 7·1조치는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영유통부문을 정상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7·1조치는 각 기업소에서 생산한 만큼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도록 했지만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가동되지 않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개인장사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생산현장으로 돌려보냈으

⁶⁵ 조명철,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조명철 외,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 129.

나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일거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직장을 이탈하여 장사에 나서는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국가공급소와 국영상점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쌀과 공산품들은 더욱 은밀한 형태로 암거래되었다. 결국 북한 당국은 2002년 9월경부터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허용하였고 12월경부터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7·1조치 이전까지 암시장 경제에서 안정을 찾고 있던 서민들의 생활이 폭등한 물가 때문에 엉망이 되자 민심이 흉흉하였다.⁶⁶ 국가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7·1조치로 배급제를 폐지한 이상 주민들이 생필품 부족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제부문의 부분적 양성화 조치는 불가피하였다.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생필품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정착하게 되자 북한 당국은 암시장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을 합법화하여 종합시장으로 확대발전시켰다. 2003년 4월 1일자 『조선신보』에 이어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고 종래의 농민시장을 공산품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올해들어 회계법이 채택되고 농민시장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되었다”면서 “경제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농산물 등 토산물 뿐 아니라 공업품까지 사고 팔 수 있는 종합시장이 북한전역에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⁶⁷ 통일부 추정에 의하면 평양에 40여개, 각 시·군에 1~2개씩 전국에 300여개의 종합시장이 설

⁶⁶ 남중인의 증언.

⁶⁷ 『중앙일보』, 2003년 6월 26일.

치되어 있다.

종합시장은 국가가 물자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중 상설 운영된다. 종합시장에는 개인 및 기관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장건물에 매대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종합시장에 개인의 입점을 허용한 것은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조선신보』에 의하면⁶⁸ 2003년 3월말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 것으로서 시장을 통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종합시장은 암시장을 통제하려고 해도 실효성이 없으며 주민들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보다는 양성화하여 국가의 관리 하에 두자는 전략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차원의 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자격, 상품의 품종 등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시장은 ‘암시장’과는 구별된다. 규칙에 따르는 시장으로서 국가경제의 공식무문으로 편입된 셈이다.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시장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개별적 주민들만이 등록되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다. 지금은 통일거리시장에 있는 판매대의 약 5%는 공장·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 한편 가격 면에서는 행정의 조절, 통제기능이 더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 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고 한다.⁶⁹

⁶⁸ 『조선신보』, 2003년 4월 1일.

⁶⁹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종합시장은 장마당을 축소하려는 국가유통체계 조치가 실패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처음에는 7·1조치를 통하여 암시장을 국영시장에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결국 암시장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주도에 의한 변화에 국가가 수동적으로 적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1조치는 정책이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수동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⁷⁰

종합시장의 도입 이후 변화가 불가피한 부문이 국영상점일 것이다. 종전에도 상품 고갈로 국영상점은 매우 고전했는데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국영상점은 고사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국영상점들은 시장화 쪽으로 생존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국영상점의 (위탁)수매상점화인데 이는 국영상점을 시장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이나 북한 내에서 상품을 들여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이윤으로 돌려주고 종업원 등의 생활비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한 탈북자의 증언이 국영상점의 실태를 잘 설명해 준다.⁷¹

국영상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위에서는 상품을 공급해 주지도 않으면서 계획목표를 달성하라고 닦달을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돈을 벌라고 한다. 남들이 다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지배인 자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수매상점화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기는 어렵다.

⁷⁰ 신지호,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4.7), p. 13.

⁷¹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와 함의,”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현대북한의 연구와 남북관계』 (2004.9.17), pp. 267-268.

시장에서는 농민이나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소·협동농장도 시장활동에 참여, 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있다. 통일거리 시장의 경우 판매대의 약 5%를 공장·기업소의 몫으로 배정하며, 상품판매자는 시장에 ‘시장사용료’(자릿세)를, 국가에는 소득에 따라 ‘국가납부금’(일종의 소득세)을 납부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경제활동을 국가경제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지에 개설된 종합시장을 하나의 단위조직 차원에서 ‘국영기업소’로 체계화하여 운영하는 셈이다. 국가계획 초과달성 유도를 위해 공장·기업소는 기본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된 생필품의 30% 한도 내에서 시장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2003.12.22)는 “검증되는 개선조치의 생활력”이라는 제하로 북한 종합시장의 체계화를 위한 조치를 보도하였으며 종합시장 개설을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심도와 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변’으로 규정하였다. 2003년 3월 김정일 지시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한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맥락에서 시장의 운영방식을 크게 전환시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조선신보』 보도는 사회주의원칙과 국가계획에 따라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종합시장’에 자본주의 시장과는 구별되는 ‘우리식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리사회주의의 대담한 시도(경제관리개선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되었다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신보』는 “인민들도 나라의 재정부담으로 모든 생활이 보장된 과거를 이제는 먼 옛날의 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경제부흥을 위해 다른 방도는 없으며 경제관리개선은 아마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중국 외교부장 일행으로 하여금 2004년 3월 24일 통일거리시장을 참관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⁷² 보도에 의하면

중국 이조성 외교부장 일행이 통일거리시장 운영 정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시장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는 것이다. 통일거리시장은 2003년 3월 북한이 농민시장을 공산품 거래까지 가능한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시범적으로 개설한 대규모 시장으로서 규격화된 매대를 개인,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에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중국 외교부장으로 하여금 동 시장을 참관토록 한 것은 최근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종합시장을 중국 외교당국자가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 7·1조치 이후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과 국제사회에 간접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사회 변화의 불가역성(不可逆性)에 따라 시장경제원리가 확대 적용되는 방향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칙이 반영되고 있다. 현재 종합시장의 가격은 형태는 국정가격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가격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³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 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 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한다고 한다. 북한이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가격과 임금 인상조치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다. 『조선신보』에 의하면 북한의 국가가격제정국 관리가 7·1조치의 성격을 경제 운영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으로 올바른 ‘가격설정’을 꼽고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계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한다.

⁷² 『평양방송』, 2003년 3월 25일.

⁷³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p. 262.

쌀값의 경우 물과 전기, 비료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계산하여 생산 원가를 도출했다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고려하였고 국내에서의 수요와 공급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그 동안 북한은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사들여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재화의 희소성이나 생산코스트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재화가 수요와는 연계되지 않은 채 공급이 이루어져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완벽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해서 ‘사실상의 시장가격’을 결정해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가 통제해오던 가격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물가를 새롭게 결정함으로써 물가인상은 불가피하고 결국 이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도 동반상승하게 되었다.

(2) 물자교류시장

시장요소의 도입 중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원자재 시장의 창설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물자교류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못한 상태이지만 김정일이 물자교류시장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사건이다. 2001년 10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경제관리 지침을 통하여 ‘물자교류시장’ 가동을 지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원자재와 생산수단을 판매·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신보』에 의하면,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하여 공장·기업소들이 필요한 자재를 서로 주고받고 조달하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공장·기업소들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시장활동에 적극 참가할 데 대한

방침도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국가계획에 따라 ‘무현금융통’으로 공장기업소의 생산에 필요한 연료, 자재가 보장될 수 있었으나 7·1조치 이후는 각 단위가 현금을 갖고 자기계획에 따라 생산·운영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기업운영관리방법의 개선과 관련,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하여 부족되는 원료, 자재의 해결 등에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보다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공장·기업소들이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생산활동을 펼쳐 이윤을 만들어내고 확보한 이윤을 임금의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생산계획을 세워 공장·기업소에 하달하고 계획에 맞춰 자재를 공급하던 경영시스템은 조금씩 변화를 보인 것이다. 또 생산주체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상태가 부실한 공장·기업소는 생산활동을 펼치기가 어렵게 되었다.

공장·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생산과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생기는 여유물자들과 국가가 기업소의 상대적 독자성과 창발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물의 일부를 자체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물자들을 서로 연관된 공장·기업소들 사이에 유무상통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국가계획에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기업소들로 하여금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걸리는 문제를 자체로 기동성 있게 풀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국가계획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⁷⁴

⁷⁴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 유통영역에 대한 주체적 견해,”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2).

다. 무역의 활성화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 조치중의 하나는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들이다. 과거에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이러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경제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든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다 자체로 해결한다는 것은 경제적이 못되며 따라서 없거나 부족한 것, 실리가 나지 않는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수입무역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⁷⁵ 물론 과거에도 이런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실리주의의 원칙에서 주장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원자재와 설비뿐만 아니라 소비재에서도 같은 논리가 주장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경제연구』에 의하면, “우리당은 변화된 현실조건에 맞게 경공업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금의 경공업제품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 것, 실리가 보장되는 것만 자체로 생산하고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올때 대한 방침을 취하였다”고 한다.⁷⁶

무역의 주체가 다원화된 것도 시장경제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조선신보』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시기 조선에서 무역활동은 전문기관만이 담당·수행하였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별적인 공장·기업소들도 필요에 따라 무역성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무역활동을 벌릴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역거래도 더 이상 전문기관의 독점물이 아니라 국제상품전람회 일반상점의 지배인이 찾아 와 외국무역업자와 거래활동을 벌이는 광경이 벌어 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⁷⁷

⁷⁵ 리명숙, “현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4), p. 34.

⁷⁶ 위의 글, p. 35.

개별기업소가 무역업을 할 수 있으면, 개인들은 기업소 이름을 걸고 무역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역업은 곧 국내의 유통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화폐경제, 상품경제 및 소상공생산제의 도입

7·1조치가 가격을 현실화하고, 현물배급제를 임금노동제로 전환한 것과 종합시장을 개설하여 공산품의 상거래를 합법화한 것은 북한에서 화폐경제, 상품경제, 나아가서 소상공생산제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기업 및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었고 이는 기업행동에 시장원리가 침투되는 형태와 결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⁷⁸

가. 가격의 현실화

7·1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적 조치의 하나가 가격의 현실화이다. 가격현실화 조치는 기존의 계획가격체계에서 시장가격체제로 전환시켜 북한경제를 시장논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김정일의 담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 근로자들이 자기 수입으로 식량도 제값으로 사먹고 살림집도 사서 쓰거나 온전한 사용료를 물고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사람들의 물질생활의 기초인 상품가격을 바로

⁷⁷ 『조선신보』, 2003년 8월 25일.

⁷⁸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p. 269.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상품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고쳐 정하여야 합니다.⁷⁹

북한은 그 동안 주요 생필품에 대하여 배급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격의 개념이 있을 수 없었다. 가격이 있기는 하되 생산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가격이며,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배급하는 차원의 가격이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가격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사업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고 있다.⁸⁰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가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첫째, 가격을 현실화하여 대폭 인상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이 단행한 가격정책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그동안 소위 ‘인민적 시책’이라고 자부하여 오면서 작은 변화도 용납하지 않던 생활필수품의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접근시킨 것이다.⁸¹ 가격개혁은 지금까지 암시장이 번성하는 상황에서도 국정가격은 이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간극이 심화되면서 공식경제가 붕괴되었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이다. 7·1조치는 가격을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7·1조치에 의하여 인상된 가격과 요금의 개정은 각종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나아가서 생산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항목에 이르고 있다. 일상생활용품의 가격을 약 20~40배 인상했으며, 식품가격은 거의 40~50배나 인상했고, 쌀 가격은 kg당 82전에서 40원으로, 옥수수는 1kg당 49전에서 2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상 전차요금이 10전에서 1원으로, 지하철요금이 10전에서 2원으로 인상되었다.

둘째, 물가를 인상시키면서 임금수준도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인상

⁷⁹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답화 2001년 10월 3일).”

⁸⁰ 위의 글, p. 2.

⁸¹ 조명철,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p. 130.

함으로써 가격의 기능을 정상화시켰다. 사무직 종사자는 140원에서 1,200원으로, 생산직 근로자는 110원에서 2,000원으로, 탄광 등 고강도 근로자는 20여 배 인상되었고, 노동자, 농민, 과학자는 10배, 공무원은 14~17배, 군인은 40여배 인상되었다.

북한은 과거의 상품가격이 소비자위주로 정해진 것이라면 7·1조치 이후 실시된 가격은 생산자 위주의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생산자 위주의 가격조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경제난으로 인해 상품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상품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⁸²

북한 당국은 이번 가격개혁에서 식량가격을 새로운 가격제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 경우와 마찬가지로 석탄과 전력가격을 가격제정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통하여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이 이번에 쌀가격을 가격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농업중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⁸³

이처럼 북한은 7·1조치를 통하여 임금수준과 생필품의 물가를 생산가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조정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경제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되도록 한 것이다.

나. 화폐경제제도의 도입

7·1조치에서 취해진 조치의 하나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던 현물 배급제도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현금 임금으로 대체되어 이 현금으로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바뀌었

⁸² “생산자 위주의 가격조정,” 『조선신보』, 2002년 8월 2일.

⁸³ 조명철,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p. 134.

다는 점이다. 1995년 이후 식량배급은 거의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였지만 북한주민들은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에 이틀분 정도의 식량
이 배급되곤 하였다. 그런데 7·1조치를 통하여 배급제가 전면 폐지
된 것이다.

식량에서는 배급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
이 아니다. 식량 배급도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북한 당국이 식량의 유
통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둘 목적으로 과거의 배급소를 식량 상점으로
변경하여 가구당 정량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은 과거의 배
급소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화폐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징후로는 이외에 변수입 지표의 등장,
기업에서의 철저한 독립채산제의 실시 등인데, 이는 결국 화폐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경제에서 화폐는 수동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화폐는 점차 적극적인 역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⁸⁴

북한의 관영 학술논문지 『경제연구』에서도 최근 화폐경제의 도입
을 반영하는 이론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의하면 “상품화폐관계가 존재
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이 주로 상품으
로 생산되며 그 분배와 교환은 화폐를 매개로 하는 상품유통을 통하
여 실현된다.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는 현물형태로 진행되
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화폐형태로 실시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분배
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려면 분배받는 화폐를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교
환하여야 한다”⁸⁵고 주장하였다.

⁸⁴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p. 272.

⁸⁵ 최경희,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공급의 경제적 내용,”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
사, 경제연구』(2003.2), p. 38;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사회주의의 북
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2004)에서 재인용.

특히 연암 박지원의 화폐에 관한 사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의 이론과 사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지원의 화폐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란 화폐와 상품을 등가물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경제연구』는 “화폐에 관한 연암 박지원의 사상을 깊이 인식하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사상리론적 유산을 주체성있게 계승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도이다.⁸⁶ 현물배급제도가 화폐입금제도로 바뀐 것에 대한 정당성 설명을 우리의 고전 사상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화폐경제를 도입하는 방향의 개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 내부의 성과급 도입이나 가계기업 허용 등과 연관해 볼 때 시장경제 메카니즘의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배급제도의 폐지는 북한의 배급망 붕괴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으나 북한은 이를 통해 명령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시장경제 도입의 전초라고 평가하였다.⁸⁷

다. 소상품생산경제 요소의 발아

7·1조치를 계기로 소상품생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소상품생산제는 자본주의의 맹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시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7·1조치에서 소상품생산경제를 촉진하는 요인은 독립채산제의

⁸⁶ 림영남,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사상 발전에 기여한 연암 박지원의 화폐에 관한 사상,”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4), p. 42.

⁸⁷ 대외경제연구원,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2002.7.25).

확대 실시와 종합시장제의 도입이다. 7·1조치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때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기업의 자율성 강화이다. 『조선신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⁸⁸ “지난날에는 국가계획에 따라 ‘무현금유통’으로 공장·기업소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연료, 자재가 보장될 수 있었지만 7·1조치 이후는 각 단위가 현금을 쥐고 자기 결심에 따라 확대 재생산을 진행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는 국영기업소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방침에 의하면 “공장·기업소는 기본제품의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만들어 그중 30%를 국가납부를 하지 않은 ‘생산유지비’로 쓸 수 있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정해진 30%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생산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공장·기업소에 있어서는 국가계획의 초과달성이 시장거래의 매상고를 올리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신보』는 “지금 평양사람들은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우리 식’의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업의 자율성 부여는 중앙정부가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에 원자재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장·기업소 단위로 자력갱생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종업원을 먹여 살리라는 의미이다. 7·1조치에서 기업의 자율성 강화에 포함된 의미는 공식경제가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력업종 외의 상품이라도 뭐든지 가능한 것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이 수익금으로 종업원의 노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업차원에서 시장을 겨냥한 상품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주력 업종외의 상품생산은 과거에 8·3소비품생산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8·3소비품은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남

⁸⁸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은 짜투리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필품을 생산하여 국영상점에 국영가격으로 넘기도록 한 것인데 반하여, 7·1조치에서 추가된 내용은 생산품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며 시장에 시장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점이다.⁸⁹ 가령, 한 신발공장에서는 신발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가구를 짜서 이를 직원들의 노임으로 주도록 하였다고 한다. 어떤 기업은 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함흥 영해 수지공장의 경우를 보자. 이 공장은 북한 전국의 농업용 비닐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비닐은 생산하지 않고 부수입을 위하여 학생 가방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공장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지난 4월 현지도 시에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한 장면이 북한 TV에 10분간 방영되었다고 한다.⁹⁰

북한의 기업들은 이러한 상부의 지시를 기업의 부업 제도로 인식하여 기업소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업소 내 종업원의 개인단위 부업으로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기업소 내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소 밖에서 부업을 하여 일정한 금액을 기업소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1990년대부터 음성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이다. 공장·기업소 마다 한 달에 800원씩 내고 기업소 밖에서 부업을 하는데 기업소 밖의 부업이란 곧 장사를 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소는 원자재난과 전력난으로 공장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역할은 곧 개인의 부업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⁹¹

북한 기업에서 최근 유행하는 말이 두 뭇을 하라는 것인데 한 뭇은 국가계획량을 달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 뭇은 8·3제품을 생산하는

⁸⁹ 탈북자 윤0실의 증언, 2003년 8월 18일.

⁹⁰ 정창현(중앙일보 기자), 통일연구원에서의 간담회 내용, 2003년 7월 10일.

⁹¹ 탈북자 남환철의 증언.

것인데, 최근에는 두 뭇에서 더 나아가 세 번째 뭇으로서 개인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원래의 8·3소비품 생산제도를 확대한 것이지만 몇 단계의 변형을 거친 셈이다. 신발공장이라도 8·3제품으로 가구 등의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가구도 안만들고 노동자들을 장사 내보내서 회사에 800원씩 8·3자금으로 지불하게 한다는 것이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관행은 전 북한에 다 퍼져 있다고 한다.⁹²

노동자를 기업소 밖에 장사 내보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책이 자재 인수원이다. 인수원은 매월 800원을 직장에 납입하고 대신 자유롭게 장사를 하러 다니는 직종이다. 인수원 100명중 99%가 개인장사를 한다고 한다. 7·1조치 전에는 300원을 납입하도록 했지만 이후에는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한다.

통일거리의 군고구마 장사는 유명한 사례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고구마를 군고구마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국가에 납입하면 할 수 있다. 60여명 여성을 고용하여 군고구마를 판매한다고 한다.⁹³

두 번째로 7·1조치가 소상공생산지도를 촉진시키는 측면은 종합시장을 신설하여 공산품의 판로를 보장한 것으로서 기업이나 개인차원에서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⁹⁴ 종합시장이 도입된 이후 개인들의 부업생산 또는 개인수공업의 확대를 초래했다.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탈북자 증언에서 개인수공업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⁹² 강국인(함북 회령 자재인수원, 2002년 12월 탈북)의 증언.

⁹³ 서선창(함북 회령 피복공장 자재인수원, 2002년 10월 탈북)의 증언.

⁹⁴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p. 264.

2003년 여름부터인가. 옷공장에 다니던 기능공들이 대거 공장을 빠져나갔다. 임금도 제대로 안 주지, 물가는 오르지 아니까 공장에 붙어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이들은 집에서 놀면서 옷을 임가공하거나 나처럼 직접 옷을 만들어 시장에 팔아 그 돈으로 생활을 꾸렸다.(탈북자 G씨)

개인이 만드는 것으로는 옷, 신발, 모자, 비누, 빵, 사탕 같은 것들이 있다. 신발을 보자.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전문기술자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신발을 만드는 기계가 있다. 원자재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공장 자재를 훔쳐서 장사치들에게 판 것들이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신발을 만들어 시장 장사꾼들에게 넘겨준다.(탈북자 O씨)

늘어서 사회활동의 일선에서 물러선 사람 등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내수공업으로 빵, 당과류 등 식료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그것을 (농민)시장에 판매하곤 했다. 그런데 7·1조치 이후 평양시의 각 구역에 이들이 일하는 생산기지를 꾸리고 각 상점들에 생산물을 도매로 넘기게 했다. 상점에 진열된 이것들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그것보다 10원 정도 싸다.(탈북자 L씨)⁹⁵

그런데 모든 개인과 기업소가 이렇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력공급이 안되는 기업소나 원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 소상공생산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은 협동농장의 토지를 일부 불하받거나 아니면 유희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근무했던 회령시 유선피복공장은 땅 5정보를 배정받아 그 땅에서 600톤의 식량을 생산하여 먹고 살았다고 한다. 공장기업소가 땅을 배정받게 된 경위는 지역의 산림보호원과 결탁하여 땅을 불하받았다는 것이다. 이 공장은 주위에 농촌을 끼고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⁹⁶

⁹⁵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pp. 265-266에서 재인용.

탈북자의 이러한 증언과 유사한 내용이 일본 『산케이신문』에 의하여 보도된 적이 있다.⁹⁷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부의 내각지시 제9호로 2004년 1월 31일자에 내려진 조치는 북한의 집단농업의 단위인 협동농장의 유희지, 황폐된 농지, 경작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빈 땅, 생산성이 없는 과수원 등을 노동자들에게 대여해 경작시킨다는 것인데, 공장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원, 병원직원, 또는 연금생활자에게도 분배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도 경작형태가 집단농이며 수확량의 6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유인동기가 떨어져서 별 실효가 없다고 한다.

종합해볼 때, 북한에서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소상품생산 양식이 생겨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징후의 하나이며 초기자본주의의 맹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사영화의 맹아

7·1조치로 각 개별 기업소의 독립채산제와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국영상점이나 식당 등 상업과 서비스업종이 사영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지배인 또는 개인이 국가에는 이득금만 내고 나머지 이익금을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영상점이지만 국가가 상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보급해주지 못하고 상점 지배인의 개인적 수단으로 상품을 확보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식매점, 백화점은 결국 개인 운영으

⁹⁶ 서선창의 증언.

⁹⁷ 『산케이신문』, 2004년 10월 24일.

로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의 상품이 모두 개인 상품이기에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금은 개인의 몫이 되고 대신 국영 상점을 사용하는 대가를 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즉, 형식은 국영상점이지만 실제 내용은 개인상점이다.⁹⁸

7·1조치 이후 대부분의 국영상점 또는 식당들을 개인이 접수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소유는 국가이지만,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누구 소유든 아무 상관 없다고 한다. 세금 즉 ‘이득금’만 내면 된다.⁹⁹

지역마다 편의봉사소에서 온천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과거에는 국가소유였지만 이제는 기업소의 자율화 방침에 따라 목욕탕의 수입 중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자체로 처분한다고 한다. 관리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7·1조치 이전에는 입장료가 독탕이 5원, 대중탕이 3원씩이었는데, 이후에는 독탕이 15원, 대중탕은 10원으로 인상하여 수입금을 올렸으며, 이전에는 수요일에는 휴무했으나 이제는 휴무도 없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¹⁰⁰

이 밖의 다른 업종에서도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가령, 바닷가에서 배를 소유한 개인이 여럿 있다고 한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개인에게 팔기 때문이다. 개인 소유의 배를 가진 사람은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여 개인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신보』가 보도한 몇 가지 사례도 사영화의 경향을 지적해주고 있다. “규모가 작은 ‘주민식당(1970년대 말, 가정 일을 보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 하에 평양시내의 매 구역, 동마다 개설된 단고기집을 비롯한 각종 식당)’은 나라에서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여느 식당과 달리 개인적으로 운영된다. 최근 시기 경제개혁이 실시되어

⁹⁸ 강국인의 증언.

⁹⁹ 서선창의 증언.

¹⁰⁰ 강영란(사적지 강사, 2003년 12월 탈북)의 증언.

공장·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의암식당을 비롯한 주민구역의 자그마한 식당은 오래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온 셈”이라고 한다.

“의암식당 종업원들의 현재 로임은 작년 7월에 비해 150%수준으로 올랐다. ‘주민식당’은 매상고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나라에 상납하고 나머지를 종업원들의 로임과 식당운영에 돌리게 된다. 의암식당의 경우 70%는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쓰고 있다”고 한다.¹⁰¹

사영화 추세는 더욱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사회주의체제는 대중적 지지도가 취약하였기 때문에 사영화는 사회주의 정부에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사영화를 추진함으로써 개혁지향적 정부는 농민, 상인, 도시기업인들과 제휴·동맹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영화는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취약하였던 사회적 지지를 해주는 고객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⁰² 일반 주민과 엘리트간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셈이다.

3. 이윤과 경쟁의 도입

가. 이윤 추구하고 실리사회주의

북한이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서 핵심적 구호로 내세운 것이 실리사회주의이다. “현시기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최대의 실리를 보장하는 문제”라는 주장,¹⁰³ “모든 경제활동에서 높

¹⁰¹ 『조선신보』, 2003년 10월 15일.

¹⁰² Daniel Kelliher, *Peasant Power in China: The Era of Rural Reform, 1979~1989*, p. 8.

¹⁰³ 『노동신문』, 2002년 3월 18일.

은 수익성을 올리는 것이 필수적 과제이며 실리가 철저히 보장된 경제관리사업을 적극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¹⁰⁴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⁰⁵ 북한의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말은 시장지향적 변화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실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의 경제이론지 『경제연구』에 의하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리득이 주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¹⁰⁶고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어원적 의미로는 실리=실제적 이득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리’의 실제 경제생활에서의 의미는 ‘이윤 극대화’임을 알 수 있다. 실리의 보장이 이윤의 극대화를 의미한다는 것은 『경제연구』에 제시된 실리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나 있다. 즉,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것을 실리 평가의 기준으로 하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연구』는 ‘변수입’이 실리평가의 기준이라고 정의하였다.¹⁰⁷ 『경제연구』에 의하면 변수입은 “판매수입에서 생활비를 댄 원가를 공제한 것으로 계산되는 것인만큼 변수입의 크기는 판매수입의 크기에

¹⁰⁴ 『천리마』, 2002년 3호.

¹⁰⁵ 김정길,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1), p. 13.

¹⁰⁶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3), p. 27.

¹⁰⁷ 위의 글, p. 27.

많이 관계된다. 그러므로 변수입을 늘려면 판매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판매수입의 내용이다. 『경제연구』에 의하면 변수입은 현물지표별 계획에 따르는 수입뿐만 아니라 계획외의 수입도 포함된다는 것인데 계획외의 수입이 증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계획외의 수입만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행한 다음에 추가로 생산되는 계획 외 수입을 평가실적에 인정해준다는 단서가 달려있기는 하다. 즉, “현물지표별 계획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변수입계획수행률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현물지표별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범칙금을 계산하여 변수입계획수행률에서 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¹⁰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리를 구성하는 변수입의 개념으로서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공제한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 것은 곧 실리는 이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실리는 교조적인 사상성과 혁명성보다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¹⁰⁹

실제로 7·1조치가 취해진 이래 각 기업소들은 변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변수입지표가 도입되기 전까지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업의 계획수행평가지표는 총생산액지표였다. 이때의 평가의 기준은 생산량에 있었다. 그러나 변수입지표에서는 변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변수입지표와 판매수입지표의 차이는 변수입의 경우 생산비가 차감된 후의 결과치 라는 점에서 판매수입지표와는 다르다. 원가절감의 유인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변수입지표는 판매수입의 증대와 원가절감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윤의 개념을 강조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

¹⁰⁸ 김상기, “변수입지표에 대한 소고,”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4.9), p. 5.

¹⁰⁹ 서만영(44세, 함북 단천 시병원 의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것은 여전히 현물계획지표가 기업이 달성해야 할 일차적 과제이지만 이윤의 개념을 기업경영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기업소가 변수입을 가지고 국가납부와 종업원들의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계획을 달성하면 그에 상응하게 국가납부를 하고 노임을 지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총생산액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선행항목을 충족시키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합기업소가 변수입의 분배 몫을 내부에서 어떻게 조절하겠는가, 지배인으로서는 항상 골머리가 아픈 문제이다. 경영관리에서 출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배인은 기업소 당위원회의 집체적 협의마당에서 실리추구를 위한 합리화안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한다.¹¹⁰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실제 기업경영에서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일꾼들 속에서 많이 사용된 말은 실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꾼들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간부들에게 실무능력을 겸비한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충성이라는 것 하나로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능력이 없는 일꾼들이 국가를 좀먹고 자리지킴을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충성을 해야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리가 없으면 자리를 내놔라고 압박을 한다고 한다. 2002년 경 방영된 TV 드라마 「비켜라」는 능력이 없는 간부는 자리를 내놔라는 것이 주제라고 한다.¹¹¹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확대재생산이 안되기 때문이다.

¹¹⁰ 『조선신보』, 2003년 10월 24일.

¹¹¹ 서만영의 증언.

능력 있는 실무일꾼이 경영을 하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실리에 대한 강습까지 했다고 한다. 경제일꾼들, 즉, 공장·기업소 지배인, 기사장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실시한다고 한다. 엄청난 인적 손실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더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제적 이윤이 남는 방식이 기업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회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먹이지 않고 말로만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더는 안된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한 이 노선은 사상을 양보했다는 것보다는 실리를 중시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¹¹²

이러한 추세는 각계각층에서 공짜가 없는 이익추구의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령,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여객자동차사업 소이지만 지금은 실리주의원칙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부설공장에서 다른 기관, 기업소의 자동차를 수리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묘향산, 구월산 등 명승지관광을 즐기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버스운행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묘향산으로 간다면 요금은 한사람 1시간당 30원을 받는다”고 한다.¹¹³

실리주의는 농업부문의 분배제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과거에는 실적 평가의 기준이 작업반이었는데 이제는 분조로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작업반의 생산실적에 따라 분배된 몫이 그 아래에 3~4개 있는 분조에 고루고루 나뉘어졌지만 이제는 분조도 실적이 계산되어 그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었다.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생산실적을 계산하는 단위가 80~120명 단위(작업반)로부터 10~15명(분조)으로 이행하였다. 또한 농장원들은 1년에 한번 결산을 하여

¹¹² 위의 증언.

¹¹³ 『조선신보』, 2004년 3월 16일.

1년 몫의 식량과 현금을 받는데 2003년도 청산협동농장에서는 현금이 1인당 평균 6만원, 가장 많이 받은 분조에서는 한 사람당 12만원을 받았다”고 한다.¹¹⁴

김정일은 2000년 8월 자강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에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농장원들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즉 공장에서 기대별, 노동자별 도급제를 하듯이 농장원들에게 뽕밭과 누에칸을 고정 담당시키고 생산물의 질과 양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보며 분조가 누에고치 생산계획을 수행했거나 못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개별적 농장원들도 자극을 받게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보도록 제시하였다.¹¹⁵

이러한 실리주의를 강조한 결과 공장·기업소는 시장에서 생산품을 팔아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높여 자신들의 몫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 증대는 자연스럽게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기업소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토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송기계공장에서는 성과급제도 및 실적에 근거한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이 두배이상 향상되었다고 한다.¹¹⁶

실리주의의 개념이 일반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은 보다더 진취적이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들어와서 실리를 강조한 이래 기관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서도 보수가 없이 무보수로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노력을 판다는 것은 없어졌으며, 보수가 없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한다”고 한다. 『조선신보』(2004.11.22)

¹¹⁴ 『조선신보』, 2004년 1월 21일.

¹¹⁵ “농업생산의 장성에서 농민들의 책임성과 역할의 제고,”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11).

¹¹⁶ KOTRA 북한팀, “북한에 확산되는 자본주의 맹아,” 『북한경제속보』, 2004년 5월 28일.

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들과의 인터뷰에서 7·1조치와 관련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체계의 확립”이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¹¹⁷ 북한주민들은 이제 모두 돈벌이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일해 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요약컨대, 실리주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윤극대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곧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나. 경쟁 개념의 강조

북한에서 과거에는 경쟁의 관점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제도가 양성화됨에 따라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선신보』에 의하면 “평양의 상점들에는 두 개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나란히 진열되는 경우가 있다. 나라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비누나 치약의 가격은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의 ‘질’이 구매자들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하여 상품의 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경쟁의 개념이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과거의 주된 관심은 국가에서 주는 생산지표를 달성하는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관행에 문제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선신보』에 의하면 “사회주의에도 경쟁은 있어야 한다. 다 좋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적 추세를 따라 갈 수 없다. 경쟁을 통해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야 인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¹⁸

북한의 경제이론지 『경제연구』에 최근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시장에서의 경쟁개념을 중시하고 있는 맥락에서 상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상표는 한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다

¹¹⁷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p. 272.

¹¹⁸ 『조선신보』, 2003년 9월 23일.

른 생산자가 생산한 같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밝히는 표식”이라고 정의하고, “상점이나 시장에서 특히 대외시장에서 제품이 잘 팔리거나 팔리지 않는 것은 모두 상표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보았다. “잘 팔리는 제품의 상표를 소유한 기업소는 자기 상표의 질적 우위성을 유지하려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소는 제품의 질을 높여 유명한 상표로 되도록 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¹¹⁹

상표에 대하여 ‘시장에 내놓는 상품의 경쟁적 본질’로 정확히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이처럼 시장메카니즘의 경쟁의 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요소를 확대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4. 임금노동제 도입

가. 임금노동제의 도입

북한에서 7·1조치 이전의 공식적인 분배제도는 노동보수계획에 따라 분배되는 노동임금제였다. 노동보수계획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지불한 노동 보수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데 생활비계획, 장려금계획, 상금계획 등에 따라 작성되도록 되어 있다. 생활비계획은 직급에 따라 노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임금은 일반노동자가 70~80원 규모이며, 공장·기업소 지배인은 150~200원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액수는 북한에서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을 위한 것이고 실제 생계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량 등의 기본 생필품은 현물

¹¹⁹ 황명희, “경제생활에서 상표의 역할과 보호,”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3), pp. 35-36.

배급제에 의하여 배급으로 주어졌다. 식량과 주요 생필품은 직업에 따라 품목과 양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생산성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되어 있었다. 가령, 성인 남자는 800g, 학생은 500g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배급제는 식량부족으로 배급이 중단되었고 노동임금은 암시장에서는 휴지나 다름없는 액수였다. 쌀 1kg에 40여원의 가격에 비하면 노동자의 80원 월급은 의미 없는 액수였다.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기존의 분배제를 전면 개혁하였다. 배급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고, 임금은 생산성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다는 ‘능력급제’를 도입하고, ‘실리보장’이라는 개념 하에 화폐에 의한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새로운 임금체계는 직급별로 기본급을 정하고 개인별로 노력하고 생산한 만큼의 성과급을 합하여 지급된다고 한다. 새로운 임금체계는 자본주의의 임금노동제¹²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분배제도가 이렇게 변화된 배경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식량배급을 계속할 정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한 것이며, 임금노동제를 도입한 것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동원 체제의 개혁을 의미한다. 그 동안의 보수체제는 현물배급제로서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무상에 가까우며 이 무상배급제도는 노동의 양과 질에 거의 무관하게 1인당 정액의 배급을 받는 것이다. 이 제도 때문에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를 못 느끼었다. 열심히 일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정액제의 배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분배의 원칙은 북한의 용어대로 ‘평균주의’였다.

¹²⁰ 임금노동제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제도로써 자본주의 노동보수제의 핵심이며 갈 맑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자본주의의 특징을 임금노동제로 파악하였다.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생활비를 줄 때 기업소가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고 하여 일을 많이 한 사람인가 적게 한 사람인가, 기본 로력인가 보조부문 로력인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똑같이 계산해서 주었으며, 협동농장원들인 경우에도 농장에 나가 일을 잘했건 못했건 가동일수만 보장하면 한해 식량을 가족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똑 같이 다 주었다.¹²¹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보수제에 있어서 기존의 평균주의를 폐기하고 임금노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자기가 탄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절대로 공짜, 평균주의가 없다. 누구나 다 자기가 번 돈으로 쌀을 제 값으로 사먹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해 온 낮은 가격에 의한 식량공급제는 194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기 노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은 불과 3.5%밖에 되지 않았다. 하루만 일하면 한달 식량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애써 일하지 않고도 살아가게 되어 있었다. 일할 수 있는 많은 가정부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서 열성을 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특히 최근 년간에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직업마저 버리고 장사나 하면서 자기 개인의 리속을 채우는데로 나갔다.¹²²

북한이 채택한 임금노동제는 분배제도에 있어서 사실상 자본주의의 본질에 가까워진 것이다. 왜냐하면 칼 맑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임금노동(wage labor)으로 규정하고 임금노동이 노동자 착취의 개념을 담고 있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배급제 폐지 및 임금노동제에 근접하는 보수체제

¹²¹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강연 자료.”

¹²² 위의 글.

도입은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며, 자본주의적 보수체제에 근접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나. 노동동원 양식에서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이전까지 북한의 노동동원 양식은 정치·도덕적 자극에 의거하였다. 주체사상이 정치·도덕적 자극을 통한 노동동원을 위한 대표적인 이념적 도구이다. 1970년대에 개정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양하여 노동에서의 요령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사업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천리마운동, 속도전, 대흥단 정신, 성강의 봉화 등 농업과 공업부문의 각종 구호들은 노동력 동원에서 박차를 가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970년대에 새롭게 개정된 주체사상의 핵심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명제를 앞세워 주민들 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내용이다.

7·1조치는 이데올로기나 사상교양, 집단생활, 인간개조사업으로는 노동동원에 실효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화폐 및 물질적 인센티브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의 현물 및 무상 제공을 없애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서 자력갱생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최소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력갱생이 국가단위의 경제발전 노선이었으나 이제는 개인차원의 생계유지의 개념으로 변화된다. 일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공짜로 배급받던 제도는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현물 배급제는 연령에 따라, 필요에 따라 1인당 정량의 현물배급을 받는 제도로서 김정일이 지적한 대로 ‘평균주의 분배’ 방

식이다. 7·1조치는 평균주의를 지양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배급을 주던 것을 ‘자기가 일한 만큼’ 화폐임금으로 받아서 국영상점에서 구매하도록 한 조치이다. 가게에서 수입과 지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번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노동보수제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에 입각한 배급제도를 폐지하고 임노동에 의한 자력갱생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제관리 방식 및 체제의 성격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새로이 도입한 보수제도는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다는 ‘능력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실리보장’이라는 개념 하에 화폐적 보상을 중심 제도로 도입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공짜로 주던 배급을 생산성만큼의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북한식의 배분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은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생산적 열의를 높이기 위해 도급제 생산제를 도입한 셈이다. 가령, 계획외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그 만큼 보수를 받게 된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나오기 전에 월급이 50~100원 정도였다면,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에서 3천원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기본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110원에서 2천원으로, 광원 등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는 6천원으로 임금이 올랐다. 여기에다 쌀 수매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임금인상은 결과적으로 구매력 제고의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을 차등지급토록 함으로써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¹²³

¹²³ 서만영의 증언.

5. 부분적 개인영농제 도입

도시 부문에서 시장요소의 도입과 병행하여 농촌 부문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북한이 2002년 7·1조치를 단행하고 2003년 종합시장을 도입한 데 이어 개인경작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농업부문에서도 개혁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들어 중국의 농업 개혁과 유사한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를 제한적인 규모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경작제도는 협동농장의 농장원이 토지(국유지)의 일부를 배분받아 스스로 경작한 뒤 생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은 직접 개간한 소토지(땀기밭)나 자택 주변의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국유지에 대한 개인경작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¹²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증거는 『조선신보』의 보도와 최근 탈북자 및 중국을 왕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의 일종인 ‘포전(圃田)담당제’를 도입했다고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¹²⁵가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개인경작제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부상은 “현재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¹²⁶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분조(7, 8명으로 구성된 협동농장의 작업 단위)를 더 작은 단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협동농장에) 주어졌고 그

¹²⁴ 『동아일보』, 2004년 12월 5일.

¹²⁵ 『조선신보』, 2004년 12월 11일.

¹²⁶ 포전이란 ‘알곡이나 작물을 심어 가꾸는 논밭’으로 경작지를 일컫는 말이다. 북한이 도입했다는 포전담당제는 이 포전을 가족이나 개인에게 나눠준 뒤 경작하도록 하는 개인경작제도의 다른 말인 것으로 분석된다.

런 속에서 더 적은 인원으로 포전을 담당하는 포전담당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같은 노력을 가지고 같은 땅에서 알곡이 더 많이 난다면 바로 그것이 실리주의에 맞는 것”이라며 “우리는 실리주의 원칙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을 늘릴 수 있는가를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이 제도의 실시 범위가 전국인지 일부 지역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협동농장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다”고 밝혀 전국의 협동농장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탈북자들도 2002년부터 함경도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경작제도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가령,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올여름 탈북한 차00(36세, 남)는 농장에서 강냉이(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땅만 골라 토지 비옥도를 감안해 농민 1인당 200~400평씩 나눠 주었다고 말했다. 황해남도 벽성군에 살면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최00(67세, 여)도 아들이 올해 농장 토지 350평을 개인경작지로 받았으며 이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다고 말했다.

탈북자 및 북한주민 지원 단체인 ‘좋은 벗들’도 최근 발간한 『북한소식 1호』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3월부터 1인당 300평씩 토지를 배분한 뒤 토지의 질에 따라 상중하로 세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장원들은 개인경작에 필요한 노동 시간까지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정00(46세)는 “농민들은 전체 노동 시간의 3분의 2를 농장의 공동경작지에서 일하고 3분의 1은 개인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농장은 개인에게 개인경작지용 비료 등을 지원하고 가을에 현금이나 곡물을 대가로 받아간다”며 “모든 농가는 개인경작지로 6개월 동안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 실시 이후 농장의 전체적인 알곡(곡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북한 협동농장의 쌀 생산량이 2000년 358만 톤에서, 2001년의 354만 톤으로 하락하다가, 2002년에 387만 톤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415만6천 톤으로, 2004년에는 424만5천 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2004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협동농장 개인경작 제도는 1980년대 초 중국이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함께 단행한 농업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6. 사회보장제도의 후퇴와 국가기능의 변화

가.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시장으로의 전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은 국가가 주민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배급제도였다.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란 식량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을 국가가 무료로 또는 무료로 가까운 가격에 배급해주는 제도라고 인식할 정도이다. 실제로 배급제도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배급제도가 식량과 식료품뿐만 아니라 의복, 주택 등의 기초 생필품을 포함하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제도 하에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배급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폐지된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이다.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194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공급부족인 식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나아가서 식량배급을 통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무위도식자를 배제하고, 배급자 또는 지배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1990년대 들어서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상당부분 붕괴되었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¹²⁷

유명무실하던 배급제도를 북한은 7·1조치를 기하여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북한의 7·1조치 강연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적으로 공짜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담당하던 사회보장의 기틀이 무너진 셈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강연회 자료에 의하면 공짜를 없애라는 김정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 사회보장제와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한 30여 가지의 사회적 시책들은 계속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지출을 더 늘리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가령, 연로보장자들의 연금과 영예군인보조금을 비롯한 연금, 보조금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올려놓았다고 한다. 또 부모 없는 어린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데려다 부양하는 세대들에는 부양자 1명당 매달 300원 정도의 보조금을 더 주게 된다고 한다. 노력자가 없이 아이들만 사는 세대, 부양해줄 자식들이 없이 늙은이들만 사는 세대, 부부가 다 일할 수 없는 환자로서 아이들만 있는 세대에는 가족 1명당 한 달에 60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주게 된다. 육아원, 애육원, 야영소들에서는 원아들과 야영생들의 쌀값까지도 다 국가가 부담해 준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비도 그에 맞게 계속 높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¹²⁷ 이철국(함북 온성군 양정사업소 검열지도원, 2001년 탈북)의 증언.

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2조).

북한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 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년퇴임자의 연금제도는 법적으로는 완비되어 있지만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년퇴임 후 남한으로 귀순한 김산¹⁰의 증언에 의하면, 정년퇴임자에게 배급 600g, 노임 60원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노임은 저금통장에 문서상의 입금만 해주지만 인출은 못한다고 한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퇴직하면 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한다.¹²⁸

북한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앞서워 자랑하고 있는 부문은 ‘무상치료제’인데 이것도 역시 경제난에 기인한 자원부족으로 실현이 거의 안 되고 있다. 특히 농촌과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의료기구와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사와 국제민간지원단체들이 밝히고 있다. 북한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헌법 제5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집행할 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7·1조치에 따라서 사회보장의 주담당자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되었다. 7·1조치를 계기로 배급제가 폐지되고 주택세,

¹²⁸ 이사윤(전 의과대 당비서, 2001년 10월 입국)의 증언.

전기세 등의 주요 공과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생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타의 사회보장제도는 대폭 후퇴한 효과를 낳고 있다.

나. 국가의 기능변화: 공급기능에서 징세기능으로

지금까지 북한 국가의 주된 기능은 주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러한 공급 기능은 대폭 약화되고 대신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높은 세율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기능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급은 시장에게 맡기고 국가는 시장의 질서를 관리하며 시장에서 장세를 받는 기능으로 전환하고 있다. 7·1조치는 무상 배급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공급기능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개인과 기업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걷어 들이는 징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7·1조치 이후 북한 당국은 재정수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생필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집세, 전기세, 수도세 등 그동안 무료나 마찬가지로 저렴한 세금을 내고 살았던 주민들은 이제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농민시장에서 장세가 15원에서 50원으로 올랐으며, 개인 토지 1평당 12원씩 토지세를 내도록 조치하였다.¹²⁹

그 동안 국가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오던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은 곧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제도로의 전환을 기도하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집세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모든 무료 또는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였고, 국경에

¹²⁹ 서선창의 증언.

국가세무국을 설치하여 고액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재정수입을 크게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국영기업과 국가기관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중앙정부의 힘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며, 국영상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이다. 조총련의 『조선신보』는 “나라가 허리를 펴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번 조치의 목적의 하나는 국가재정 확충을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7. 소결: 7·1조치의 의미와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는 공식경제가 무너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의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이 시장요소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당국으로 하여금 7·1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7·1조치를 취하였다고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시장요소를 대폭도입하고 있다. 7·1조치는 비사회주의적 방식으로 변성하던 지하경제를 당국차원에서 통제하지 못하자 오히려 양성화하였다. 중앙계획체제가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던 암시장과 암시장경제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경제난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고갈되자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던 대안의 사업체계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공장과 기업소에 원자재와 인건비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중앙계획체제가 가동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였던 연합기업소도 핵

심 전략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능상실에 빠졌다. 원자재의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기업소내의 기업소간 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관생산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연합기업소 산하의 개별기업들이 해체되어 자체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이 추구된 것이다. 중앙정부와 계열기업소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 가동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7·1조치는 이러한 기능마비 상태에 있는 공장·기업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독립채산제를 확대해줌으로써 개별기업들이 무슨수를 쓰든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도록 한 조치인 것이다. 그래서 기업소별로, 기업의 종업원별로 자구책의 차원에서 생산과 유통부문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돈벌이에 나서게 된 것이다.

7·1조치는 또한 암시장을 자유화하여 종합시장을 설치함으로써 계획체제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을 활용한 셈이다. 이를 위하여 도입한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현실화하여 시장논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현물로 주던 노동보수를 화폐로 전환함으로써 화폐경제의 요소가 도입되었고, 개인과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제반 요소들이 도입된 것이다.

공산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판로가 보장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유인동기가 발생하여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상품생산제가 싹이 트고 있다. 또한 국영상점과 식당 등의 판매 서비스업이 사영화 되는 추세에 있다. 동시에 상품과 서비

스를 시장에 판매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윤추구와 경쟁적 판매 의식도 도입된 것이다.

또한 임금노동제가 도입되었다. 정액 기준에 의한 배급제가 노동성 과에 따른 임금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자본주의적 임금제도인 임금노동제의 도입은 기존의 정치적·도덕적 유인에 의한 보수제를 대체한 것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은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체제에서 노동기피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만들어졌으나 별 효과가 없자 결국 주체사상의 기능이 돈으로 대체된 것이다.

공짜를 없애라는 김정일의 지시는 유명무실하던 사회보장제도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가가 보장하던 사회보장을 시장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의 기능이 사회보장의 기능을 핵심으로 하였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국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징세기능으로 전환한 측면이 많다.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도입된 시장의 요소는 실로 획기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에서 공급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뿐이지 제도 자체는 매우 시장경제적이다.

물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소유권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자본시장도 아직 없으나 개인의 자본을 기업이나 국영상점이 대출받아 영업한 후 원금과 이자를 갚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가격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장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가격자유화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핵심조건이 된다.¹³⁰

북한은 현재 소비재 유통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나, 생산재의 생

¹³⁰ 조명철,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p. 153.

산은 여전히 계획이 주도하고 있다. 이중구조적 측면이 강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시장체제는 점차로 중간재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¹³¹ 중공업, 군수산업 등 가동되고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체제를 유지하되, 가동이 중단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합기업소체제도 해체하고 개별 기업별로 생존의 자구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북한이 전면적으로 계획경제를 해체하여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¹³¹ 김연철, “7·1조치 2주년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4.6), p. 4.

7·1조치 이후 사회부문의 변화: 시장사회주의 사회화

7·1조치는 식량난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사회주의 시장경제화의 추세를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취해졌다는 사실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비합법인 것이 합법화되고 양성화된 이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시장경제화의 추세와 그것이 합법화됨으로써 더욱 강화된 시장경제화의 변화가 사회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토대로 특징지어지는 하부구조의 변화는 대체로 사회적·정치적 측면의 상부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중앙명령계획경제체제, 대안의 사업체계의 붕괴 및 폐기와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궤도 수정이 사회에 변화를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사례에서 볼 때 주민생활이 시장화하게 되면 개별 주민들은 상인화(merchantization)되고, 생산물은 상품화(commercialization)되는 경향이 있으며, 제도면에서는 시장화(marketization)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¹³² 이 장에서는 북한에서 7·1조치가 가져온 사회주의 시장

¹³² Kate Xiao Zhou, *How the Farmers Changed China*, p. 200.

경제화의 추세가 사회부문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적 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생활의 변화

가. 장사의 자율화

7·1조치 시행과 더불어 북한은 개인들의 암시장에서 장사를 전면 금지시키고 국영상점에 암시장을 흡수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시장을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경제난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7·1조치에서 당국이 공언했던 수준의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장사에 대한 통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2달 통제가 지속되다가 장사를 풀어주었다.¹³³

장사가 묵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암시장에서 금지되었던 공산품도 허용하였다. 암시장의 상품을 단속기관에게 빼앗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인민들에게 직접 통고는 않고 단속을 못하게 지시하였다고 한다. 금지된 장사가 묵인되었고, 2003년 3월에 암시장이었던 농민시장이 시장으로 개칭되어 합법화되었고, 이어서 종합시장이 설치되어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유인되었다.

암시장(농민시장)이 시장으로 된 것은 거대한 변화이다. 농민시장은 북한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필품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중요한 부문이었으나 농민시장은 심대한 통제구역이었다. 보위부, 안전부, 사회단체, 직맹, 청년동맹의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었다. 시장이 양성화되기

¹³³ 김숙영(평남 남포시 보위부 자료실 지도원, 2002년 10월 탈북)의 증언.

이전까지 북한주민은 시장에 나가면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시장에서의 상거래는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밀천을 많이 들인 물건을 팔다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다. 과거에는 암시장이 ‘메뚜기 장’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그 까닭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다가 안전원이 나타나면 물건을 들고 달아나야 했기 때문이다. 마음 놓고 물건을 팔 수 없었다. 그런데 단속 일꾼에게는 빼앗은 물건이 자기 삶을 보태는 수단이었다. 빼앗아 사무실에 두는 척 하다가 자기가 횡령한다고 한다. 암시장 시절의 북한주민들의 삶은 수난에 찬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사가 허용된 것이다. 주민생활에서 하나의 혁명이다.¹³⁴

장사의 합법화로 북한주민들의 오랜 소원의 하나가 이루어진 셈이다. 7·1조치이전의 주민들의 요구는 국가에서 배급을 안주어도 좋고, 월급을 안주어도 좋으니 장사를 마음대로 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일반주민들은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장사가 합법화되었고 세금만 내면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장사한다. 총체적인 장사의 사회이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리만 움직이면 장사한다”고 한다. 지금은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7·1조치 이후 시장은 두 배로 확장되었다. 길가에서 팔아도 통제가 완화되었다. 시장을 통해서만 먹고 사는 체제로 되었다. 알사탕을 팔든지, 야채를 팔든지 누구든지 어떤 형태든 장사를 하며, 인민반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 1명도 없다고 한다. 평양사람도 장사하는데 구역마다 장마당이 있다고 한다.¹³⁵

7·1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새경제관리체제가 도입된 것을 본 주민들은 너무 늦었지만 다

¹³⁴ 서만영의 증언.

¹³⁵ 하희웅(함북 회령시 무산군 위생방역소 위생의사, 2003년 9월 26일 탈북)의 증언.

행스럽다고 생각하며, 과도적 단계로서 미흡하지만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장사가 합법화되면서 공산품의 거래도 합법화되었다. 장사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거래품목중에는 가전제품의 확대가 주목할 만하다. TV, VTR, CD 등 공산품의 유통도 확대되어 중국산 신형 TV로 낡은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¹³⁶

장사를 자유롭게 하게 되었지만 누구나 다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에 다니는 남성들이 장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직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전히 관료주의의 벽을 넘는 과정이 필요하다. 뇌물은 이제 장사 단속에서 정치생활 단속으로 이행된다고 한다. 남자들이 장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공조직에서 이탈해야 하는데 이때 뇌물이 필요하다. 결정권한을 가진 당간부, 가짜 진단서를 발부하는 의사 등에게 광범위하게 뇌물이 공여된다고 한다. 장사가 더 성행하기 때문에 뇌물이 더 성행한다고 한다. 장사 자체는 자유이지만 장사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뇌물공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일군과 통제요원들이 장사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과 공생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가령,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차를 빌려서 쓰면서 의존하고 공생한다. 북한에서 봉고차 하나 있으면 부자이며 잘 사는 축에 속한다고 한다. 차주는 차를 사서 외화벌이 기관에 차를 넣고 그 기관 명의로 차를 운용하며 그 대가로 그 기관에 돈을 얼마씩 낸다. 또한 개인들이 휘발유, 디젤 장사를 한다. 휘발유나 디젤유는 군대기관에서 빼내어 파는 사람에게 산다고 한다. 중국의 괘호(掛戶)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사유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즘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도 있는데 개인이 지어서 기관명의

¹³⁶ 남중인(인민무력부 국제연합무역회사 원산 지사장, 2003년 3월 탈북)의 증언.

로 올린다고 한다. 자기가 운영하고 수익의 일부를 기관에 상납한다. 국영 목욕탕보다 몇 배 비싸게 받지만 돈 많고 깨끗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한다.¹³⁷

나. 생활고 가중

7·1조치는 시장을 양성화하여 종합시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낳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7·1조치가 주민생활 수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가 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다소 나아졌다고 본다. 그러나 장사를 잘못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전반적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첫째는 물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7·1조치 이후 물가는 평균 25배 올랐지만 임금은 평균 18배 인상되었다. 또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고정된 임금이 없는 일반주민들에게는 변화된 세금제도가 큰 부담으로 되었다.

둘째, 주민들의 대부분이 장사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7·1조치 이후에 장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 이유중에서 첫째는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둘째는 장사의 자유화로 말미암아 장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장사가 안된다는 것이다. 장사를 자유롭게 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절대다수가 장사를 하기는 하지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으로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 대다수의 장사규모가 매우 영

¹³⁷ 하희웅(함북 회령시 무산군 위생방역소 위생의사, 2003년 9월 탈북)의 증언.

세하다. 7·1조치 이후 장사가 자유화되었을 때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더 곤경에 빠졌다. 물가가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물가가 싸고 배급을 줄 때가 좋았다고 한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7·1조치가 행운이었다. 고지식한 사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조치였다. 장사 못하는 사람은 이미 소멸되었지만 그나마도 생존했던 사람들이 7·1조치로 더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¹³⁸

그래서 북한주민들에게는 7·1조치 이전까지 암시장에서 장사를 통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정착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가만 수십 배로 인상되는 조치가 도입됨으로써 생활고가 가중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7·1조치가 취해질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었다. 가격이 전국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나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상태였다. 배급은 없어도 시장가격은 안정되어 있었다. 조그만 별이라도 벌어서 먹고사는 환경을 개별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었다. 농촌에 묵은 땅이 많았는데 이를 경작하여 생계를 꾸리기도 하였다. 평양 시민은 김정일의 배려로 외부 지원 쌀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았고, 지원상품, 적십자 의약품 등을 평양병원에 우선적으로 지원받았다.

그런데 7·1조치로 물가가 대폭 인상되어 암시장 경제에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물가가 급등하여 생활고에 허덕이며, 국가에 지불해야 될 세금이 과중하다. 이전에는 전기세 등의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였지만 이제는 세금이 매우 과중하다. 가령, 주택세,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이 수십배로 올랐다. 농촌 역시 마찬가지이다. 협동농장의 경우 소출의 일정량을 국가에 내던 수매제도를 폐지

¹³⁸ 서만영의 증언.

하고 대신 토지비율도에 따라 1등급은 평당 40원, 2등급은 32원, 3등급은 24원을 내며,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개간한 폐기밭도 평당 12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생활이 악화되자 2000년 이후 감소 하였던 ‘꽃제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¹³⁹

7·1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물가가 너무 인상되었고 국가에 지불해야 할 집세, 전기세, 교통비 등의 세금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으로서 북한주민들의 부담은 대폭 증가한 반면, 공급측면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활고와 물가고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¹⁴⁰

가격인상 및 임금제도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불평을 하고 있다. “그 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았으나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데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배급제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제 제도마저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의존적인 인성을 가진 북한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 계층별 손익의 차이

7·1조치가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간에 차이가 있다. 평양에 거주하는 기득권층들에게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덜하며, 그렇지 못한 지방의 일반주민들에게는 손해가 더 크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임금노동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7·1조치 이후 가장 혜택을 본 집단은 군부이다. 7·1조치의 특징

¹³⁹ 하희웅의 증언.

¹⁴⁰ 위의 증언.

의 하나가 경제일꾼보다 군부일꾼의 월급이 더 높다는 점이다. “군사 중시 사상에 준하여”라는 명분으로 군대의 월급이 더 높다고 한다.¹⁴¹ 7·1조치는 군대 우선이라고 알려져 있다. 7·1조치 이후에는 장교들에게도 쌀을 사먹게 했으나 2003년 1월부터 월급에 더하여 식량을 무상공급하였다고 한다. 2003년 3월의 복권 발행과 이후의 공채 발행은 군부에 대한 월급 충당과도 관련이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¹⁴²

그러나 일반 간부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간부들에게는 과거에 비해 손해가 더 많다는 것이다. 간부층에게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간에 차이가 적어짐에 따라 간부들의 특혜가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국가가격으로 배급받아서 장마당에서 암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이 이득의 원천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간부계층 중에서 최고위층, 지도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7·1조치 때문에 불리해졌다고 한다. 과거에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과거에 국정가격으로 산 것은 공짜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그 차액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졌다. 이제는 국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는 저렴하지만 그 차이가 훨씬 적어졌다. 고위급을 제외한 간부, 즉, 도당, 시당, 중층계층의 간부들, 지도원급, 과장급 간부들은 어려워졌다. 정무원 부상, 처장도 시중가격으로 사먹어야 하게 되었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¹⁴³

이제는 당간부들의 권한도 축소되었다. 가령, 당비서에게 조직권과 인사권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중앙당의 지시가 집행이 안되기 때문

¹⁴¹ 서만영(44세, 함북 단천 시병원 의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¹⁴² 남중인(인민무력부 국제연합무역회사 원산 지사장, 2003년 3월 탈북)의 증언.

¹⁴³ 서만영의 증언.

이다. 과거에는 시당 책임비서까지 무전수를 두었었으나 이제는 도당까지 전산체제로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을 통하여 지령이 전달되는데 밑에서 그 지령을 받아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당원들이 출당과 책벌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당원 자격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조직과 행정조직이 유명무실하다고 한다.¹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 까닭은 군대와 간부에 대해서는 월급과 배급을 주지만 일반주민에게는 월급도 배급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배급이 유상배급이기는 하지만 시장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배급을 받는 자체가 특혜이다. 이러한 계급간의 불평등 배급정책은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제도적으로만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불평등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군대판”, “간부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전쟁을 하든지 빨리 결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¹⁴⁵

특히 7·1조치 이후 농촌이 가장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있다. 돈이 없으니 쌀 팔아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농장에서 꾸어다 먹고, 분배할 때 꾸어 쓴 것 갚으면 먹을 식량이 없다는 것이다.¹⁴⁶ 농촌의 농민들은 토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떠나기가 어려우며, 의식의 차이가 많이 난다. 농민은 중국 가면 죽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순종적이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루라도 메고 중국에 가서 뭔가를 사와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7·1조치 이후 장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간부들은 국정가격이 없어서 손해이며, 주민들은 가격과 세금이 폭등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¹⁴⁴ 남중인의 증언.

¹⁴⁵ 이상태의 증언.

¹⁴⁶ 남중인의 증언

농촌과 산골은 더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¹⁴⁷ 7·1조치 이후의 임금제도와 배급제도의 변화는 계급간의 골을 깊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치의식의 변화: 시장지향적 태도의 강화

가치의식이란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냐의 인식체계이다. 사회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성원들이 추구하는 행동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짓게 된다.

가. 국가의존적 태도의 약화와 시장지향적 태도의 강화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일반적 사회의식의 하나는 국가의존적 사고방식이 지배적라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일방적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을 노동에 동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직장을 배분하고 생필품 배급을 지급하는 제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사회의식이며 국가가 의도한 방향이기도 하다. 각 개인에게는 계획을 하거나 생산수단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가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계획하는 것은 고위간부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으며 개인들이 이러한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셈이다.

¹⁴⁷ 위의 증언.

북한주민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주의란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주민들 개인들은 이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중요한 정치구호의 하나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이다. 사회주의는 곧 국가 의존적 의식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과거의 국가의존적 의식이 이제는 장사를 통하여 스스로 생존하는 자구책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7·1조치 이후 주민의식의 변화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생계를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등의 국가의존적 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적 명분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국가가 책임지던 경제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집단주의적 정치생활 중심에서 경제생활 중심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⁴⁸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될 것으로 인식했지만 배급제 공식 폐지 이후에는 경제가 호전되어도 배급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배급제가 폐지되고 장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배급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배급을 타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력갱생의 의식은 장사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은 대부분이 공식부문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길은 장사를 하는

¹⁴⁸ 조명철,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p. 142.

것뿐이기 때문이다.

장사를 해야 먹고 산다는 인식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로서의 장사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평양의 군고구마 장사와 같이 기업형의 장사가 나타나고,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을 설치하는 등의 양성화 조치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들 중에는 직업으로서의 장사를 선택한 상인화(merchantization)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장사를 지속하기 위한 논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사를 해도 집단적 기관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면 된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 보답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집단주의적이기만 하면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뒤에서 논의하는 대로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의 개념을 집단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장사는 자본주의 장사와 다르다는 논리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하여 북한 관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대세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며, 장사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어졌다고 한다. 북한 간부들은 7·1조치에 대하여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공급이 안되어 가격이 상승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경제개혁’이라고 칭해도 좋다고 김정일이 지시했다고 한다. 김용순이 비공개석상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썼던 적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나가서 개혁이라는 말을 써도 좋다고 허가받았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¹⁴⁹

7·1조치를 도입한 목적의 하나가 북한주민들의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의욕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관한 한 7·1조치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낮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7·1조치의 성과가 없지만 가동이 가

¹⁴⁹ 정창현(중앙일보 기자), 통일연구원에서의 간담회 내용, 2003년 7월 10일.

능한 농업분야 및 광업분야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과 광업 분야는 생산성만큼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7·1조치가 성과를 발휘하여 경제가 회생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가령 농민의 경우 생산량의 15%를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85%를 농장에서 자체 분배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욕이 높아졌다고 한다. 광업의 경우도 생산량이 증가하여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고 북한의 전기사정도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이러한 행위양식이 야기 시킨 변화의 하나는 국영상점을 사영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영상점이나 식당 등의 서비스업종의 경우 영업형태가 대부분 건물은 국영상점이나 판매되는 물건은 모두 지배인 개인의 능력 끝에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는 세금만 내고 나머지 이윤은 개인의 몫으로 남는 사영화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기업주의 영업태도는 자본주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이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매출액에 상응하여 월급을 받는 종업원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이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달라졌다. 북한을 방문하는 많은 방북자들은 7·1조치 이전과 이후의 태도를 비교할 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가령 평화자동차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한다고 한다.

노동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진 이후 노동의욕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7·1조치를 취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노동의욕의 창출에 있다고 본다면 그 정책은 성공한 셈이다.

나. 물질주의

원래의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은 국가의 배급에 의하여 충족이 된다. 국가, 당, 최고지도자에 충성을 하기만 하면 배급이 지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국가의 배급에 대한 대가로 충성을 결심하게 되며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바로 사회주의체제와 지도부를 지지한다는 ‘사상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당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출세의 지름길이었다. 결국 북한주민의 가치의식에서는 물질은 2차적이고 사상이 1차적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교육을 받고 사회화되어 있으며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문제가 없는 체제인 셈이다.

그런데 배급제도가 폐지되고, 임금노동제가 도입되었으며, 종합시장제도가 도입된 상황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이전에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면 생계가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상품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시장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체제가 변화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상이념이나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별로 가치가 없어졌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현물배급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사상이나 이념은 2선으로 후퇴하고 물질 우선의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월급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는 월급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이전의 월급은 용돈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계비 개념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배급체제 하에서는 현금이 별 의미가 없었던데 비하여 이제는 화폐경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입당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관문으

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일반주민들에게는 당원자격이 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당에 별 관심이 없다. 이전에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성분과 당원 여부가 큰 조건이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재산과 돈이 더 큰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가치의식 변화로 나타난 제도변화의 전형적인 예의 하나는 군대기피 풍조이다. 북한 청년이 군복무를 선택하는 기본 동기는 입당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입당해서 당원이 되어도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길고 고생스런 군 생활을 거치기보다는 돈을 쉽게 버는 길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과 군대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2003년 3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복무기간을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전민군사복무제를 채택하였다.¹⁵⁰

고위급에서부터 말단 주민에 이르기까지 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돈에 대한 요구는 간부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장관급 자제들도 가게를 차려놓고 돈벌이에 열중한다고 한다. 국정가격이 상향조정되어 물건 획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했지만 이제는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신으로 집단과 조직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직에서는 한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미풍이었으나 지금은 이런 것은 껌데기에 지나지 않고 속마음으로 어찌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몰두한다고 한다.

¹⁵⁰ 정영태·박형중, “북한의 병력감축설 및 전민복무제 채택의 의미와 대책,” 통일정세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다. 개인주의

북한주민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규범은 집단주의이다. “전체는 하나로 하나는 전체로”라는 구호가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구호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노동동원을 위하여 집단주의 이념이 필요하며, 수령에 대한 우상숭배를 위하여 정치적인 동원을 위해서도 집단주의 이념은 필요하다.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과는 거리가 멀지만 북한체제를 위한 사상교육의 핵심의 하나가 집단주의이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규범인 집단주의는 국가에서 배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배급이 중단되고 개인들이 각자 능력대로 수단대로 장사, 밀수, 부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인주의는 생존의 원리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주체사상의 핵심명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명제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현실적으로 북한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고 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이제는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북한주민들에게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공식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주체사상에서 자기 운명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결행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집단주의가 북한 사회주의의 핵심 규범이라면 집단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핵심적인 규범을 침식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시장이 생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집단의 보호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졌다.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하며 도둑질, 강도

질을 하든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많다고 한다. 그전에는 김정일에게 충성해야 산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사람이 많이 죽고 하면서 사상 동향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심지어 가족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은 곧 또 하나의 입을 가진 식량을 축내는 존재로 여겨질 정도라고 한다.¹⁵¹

라. 자율성 · 자유주의

7·1조치는 많은 부문에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도 감소하였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념적 동원보다는 물리적 인센티브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당적 지도를 담당하는 당간부의 숫자와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기업소 생활이 옛날보다 다소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당원에게는 총화가 남아 있지만 사로청에게는 총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7·1조치 이후 장사가 양성화되기까지 장사가 가장 엄혹한 단속의 대상이었다. 당국의 사회통제의 핵심은 장사 통제였다. 장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다. 당국의 장사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간절한 생존권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7·1조치 이후 농민시장이 시장으로 된 것이 거대한 변화이며, 북한주민생활에서 시장의 양성화는 하나의 혁명이다.¹⁵²

장사의 자율화와 더불어 사회적 자율화도 촉진되고 있다. 장사는 사회적 이동을 확산시킨다. 장사를 하기 위하여 지리적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장사가 활성화될수록 더

¹⁵¹ 하희응의 증언.

¹⁵² 서만영의 증언.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사의 품목과 가격은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제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인식이 더욱 생활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중국에 많이 다니면서 의식이 깨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예전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¹⁵³

정치적 측면에서도 다소 통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보위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2001년 11월부터 정치범에 대한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정치범에 대한 국가보위부의 규정으로서 보위부 사업의 목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이며, 김정일에 대한 반대를 선동하는 행위가 첫째 통제 대상이라고 한다. 김정일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용서 안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통제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우선 추방법이 없어졌다고 한다. 도시에서 산골의 요덕, 자강도 등으로 추방하는 것이 중단되었고 한다. 그중에서 정치범 관리소 4개(선천 11호, 북창 19호, 함흥 21호, XX 00호)가 없어졌다고 한다.

형법도 달라졌다고 한다. 남한 방송을 듣는 경우 말을 옮기거나 행동으로 하지 않는 한은 비판서로 끝난다고 한다. 과거에는 외국방송 듣는 것을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처벌하였으나 남한 방송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처벌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부 방송에 대한 처벌의 여부는 출신성분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성분과 상관없이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성분에 따라 선별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고 있다고 한다. 가족연좌제가 약화되고 있으며, 본인 위주로 처벌한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치범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말 보다는 행동하는 것으로 초점을 이행

¹⁵³ 강국인의 증언.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범의 경우에도 주모자와 피주모자를 구분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독재 국가인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병어리들이 사는 나라라고 평가된다고 한다. 쌍소리 하면 안잡아가도 색깔 있는 소리 하면 잡아가며, 즉, 안달새(똑똑한 소리 하는 사람)를 잡아간다고 한다.¹⁵⁴

3. 정치적 태도의 변화

가. 사회주의 패배의식의 확산

북한주민들의 사회의식을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다. 사회주의에서는 착취계급이 청산되었고 평등하며, 국가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인 배급제에 의하여 생계가 보장된다는 인식이다. 교육과 의료 등 주요 사회 보장이 모두 무상으로 국가에 의하여 지원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의 본질은 곧 배급제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제대로 가동되는 한 가장 좋은 제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지배이념으로 되어 있다고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배이념은 사회주의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는 가장 정당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배급제도가 지난 50여 년간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에게 배급제는 곧 사회주의를 의미하였고,

¹⁵⁴ 김숙영(평남 남포시 보위부 자료실 지도원, 2002년 10월 탈북)의 증언.

사회주의는 곧 배급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런 배급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의 양이 줄거나 중단될 때에는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다시 원상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없어졌다. 북한에서 7·1조치를 통하여 명실상부하게 배급제도가 폐기된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 장사않고 배급타는 제도
 비사회주의 = 장사해서 먹고사는 제도

이런 인식 하에서 북한주민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현실에 대하여 “낮에는 사회주의하고 밤에는 자본주의한다”는 식으로 표현한다.¹⁵⁵ 그렇다면 김일성 사후 1995년 이후 배급을 안주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비사회주의로 먹고 살았던 셈이다. 북한에서는 장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사회주의 그루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것을 보아도 장사는 곧 비사회주의이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그 대안은 사회주의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다. 최근 30권짜리 『조선대백과사전』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를 집단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사회이며, 그 내부의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 상관없이, 집단적 형태로 운영되면 사회주의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사회주의의 본질 및 기본속성은 집단주의라는 것이다. 시장요소 = 자본주의, 북한의 시장화 = 자본주의화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다.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를 소유의 여부로 정의하지 않

¹⁵⁵ 서선창의 증언.

고 집단주의 여부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1994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연설이 사회주의를 집단주의로 재정의 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인류사회 발전의 역사적 총화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극소수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으로 전환시키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적대적 모순을 극도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현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것이 역사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으며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다.¹⁵⁶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에서 냉소적인 은유법의 하나로서 공산주의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 발전법칙은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로 발전하는데, 현재 너무 못사는 것을 빗대어서 “공산주의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곤 한다고 한다. 전쟁 전에는 잘살았는데 그때가 공산주의였구나라고 말한다고 한다.¹⁵⁷

¹⁵⁶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1994년 11월 1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54-455.

¹⁵⁷ 하희웅(함북 회령시 무산군 위생방역소 위생의사, 2003년 9월 탈북)의 증언.

나. 개혁·개방에 대한 욕구 증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 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중국의 상품이 많이 유입되면서 중국은 북한주민들에게는 큰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지 오래다. 비록 중국에 갔다 오면 정치범으로 처벌되었으며 국가 공무원들도 공무차 중국을 갔다 오면 보위부의 내적 검토, 감시권에 들었다지만 주민들 인식에는 중국이 고맙기도 하고 희망의 등대처럼 보인다고 한다.¹⁵⁸

북한 당국이 7·1조치에 대하여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라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을 때 북한주민들은 이제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제 허리를 펴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초기에 두어 달 정도는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등 반짝 효과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금 지불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시중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국가가 사람을 놀리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배급소에서 조금씩 월급을 주었지만 새 경제관리체제 이후에는 배급이 전혀 없다고 한다. 군부, 안전부, 보위부일꾼들에게는 철저히 배급 주고 월급도 주었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전혀 없다.¹⁵⁹

북한주민들의 7·1조치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두 달도 못되어 임금 지불이 중단되는 등의 파행을 보이자 컸던 기대가 좌절감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 사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7·1조치가 소극적인 조치로 판명되자 북한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었다. 7·1조치를 계기로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살길은 개혁·개방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한다.

¹⁵⁸ 박명익의 증언.

¹⁵⁹ 서만영(44세, 함북 단천 시병원 의사, 2003년 7월 탈북); 김숙영(평남 남포시 보위부 자료실 지도원, 2002년 10월 탈북)의 증언.

간부들과 교분이 많았던 한 탈북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¹⁶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욕구는 동일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지 않는 계층은 소수의 고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위부와 같은 국가기관의 전문일꾼도 장사를 한다고 한다. 공개적으로는 않지만 신의주 보안일꾼이 평양에 와서 물건을 사가거나 신의주에서 중국산 물건을 사다가 평양에 와서 판다고 한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사고팔고 하는 서민들 것은 ‘비사회주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도 장사를 한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평양의 당중앙위 일꾼, 국가 정무원 장관급 가계들도 다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산다는 점에서 지위고하가 따로 없다. 1990년대 들어서 깨달은 것은 개방해야 한다는 것, 시장경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있어서 옛날에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상당히 가까워 졌다. 옛날에는 지도층과 서민의 차이가 심했으나 지금은 사고가 비슷해지고 있다고 한다. 지도층이 시장경제 체제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북한 정책은 1인이 결정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별 당 간부로서 탈선하지 못할 뿐이다. 탈선하면 자기운명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시장경제로 가야함을 너무나 잘 알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자기주장을 못한다고 한다. 쉽게 표현하면 아침하는 것이 가장 편한 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개인적으로는 시장경제가 천만번 옳다는 것을 다 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개혁·개방은 곧 시장경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경제적으로 했고, 시장경제 방향으로 나간다고

¹⁶⁰ 서만영의 증언.

알고 있으며, 북한도 못해도 중국식은 모방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볼 때 중국이 모델로서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넘겨다보는 비교 틀이 중국이다. 실제로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거의 전부가 중국 상품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상품이 북한인을 먹이고 입힌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성공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쌀, 옥수수, 마늘 등의 식량, 신발부터 모자, TV 등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평양에서 지방까지 통털어서 중국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발전이 북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심대하다.¹⁶¹

외부로부터의 정보의 유입증가도 주민들의 이러한 개혁·개방 지향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합시장 신설 이후 특히 변화된 측면의 하나는 남한 TV의 시청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시장 도입으로 공산품 장사가 목인됨에 따라 장사의 품목과 양이 많아지면서 비합법적 물건들이 쉽게 거래된다고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산 TV인데 주로 돈이 많은 간부층이 구입하여 시청하는데, 이전의 TV로는 잡히지 않던 남한 방송이 자동채널 TV가 도입됨에 따라 잘 잡힌다는 것이다. 함흥 이남지역, 동해 및 서해 연선에서는 남한 TV가 잘 잡힌다고 한다. KBS1, KBS2, MBC, EBS 방송이 잡힌다고 한다. 그런데 중부지방은 산악지대라서 잘 안 잡히며 화질이 날씨에 영향을 받기는 한다고 한다. TV뿐만 아니라 비디오가 보급됨에 따라, 남한 방송을 CD로 녹화한 것 등이 거래된다고 한다.¹⁶² 그래서 평양 당중앙위원회와 같은 요직, 군부, 안전부, 보위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 TV를 본다고 한다.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남한 TV를 다 본다고 한다. 어찌 보면 TV 문화가 성숙한 단계로 되

¹⁶¹ 서만영의 증언.

¹⁶² 박명희(함북 00시 교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면서 길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개인적으로는 상층부일수록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한다.

결국 간부는 남한 TV를 보고, 하층부는 장사를 통해서, 간부와 하층부가 각기 다른 수단을 통하여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도 죽고 탈북해도 죽는다면 탈북도 하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시발점은 이판사판식의 현상타파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한다.¹⁶³

북한주민들 전체로 볼 때 7·1조치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7·1조치는 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하는 조치이다. 이제는 정말 못살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7·1조치가 취해지자 이제는 변화하고 있구나, 중국처럼 살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살기 어렵구나 하는 부정적 태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국제사회와 거리가 먼 것은 당연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가 거의 좌절되고 혼란이 조성되고 사회주의에서 미감이던 것이 사라지고 어찌 보면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좌절감을 더욱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7·1조치에 대하여 처음에는 호기심이 컸다. 개방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종이쪽지로 내려오는 것뿐이다. 공장에 가봐야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니, 놀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게 했다. 생산되는 것만큼 공장에서 먹고 살아라고 하지만 공장에 원료가 있나 에너지가 있나. 먹고 살 것이 없다.¹⁶⁴

¹⁶³ 서만영의 증언.

¹⁶⁴ 강국인의 증언.

다. 김정일에 대한 개혁·개방의 압력 증대

7·1조치가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생활고가 가중되자 김정일의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김정일의 무능력, 경제에 대한 무능력을 인식하고 불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탈북자도 있다.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아니라 김정일의 경제무식의 광고선전물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¹⁶⁵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장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해서 살라고 지시하였으며, 월급은 줄 능력도 없으면서 상품가격과 세금만 터무니없이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의 주민들은 불만이 더 많아졌다. 절대적인 빈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방 주민들은 월급도 없이 땅 뒤져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중국 왔다갔다 하면서 먹고 산다”는 것이다.¹⁶⁶ 그에 반해서 제 때에 월급 타는 사람들은 시당간부, 법 다루는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재판소 사람들, 군인들이라는 것이다. 당간부, 책임비서, 조직비서들의 경우 돈을 내고 배급을 받기는 하지만 양정사업소에서 매달 100kg씩 공급이 된다고 한다.

1995년 이후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장사차, 친척방문차 많이 다니면서 한국이 잘산다는 것,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 북한만 못사는 나라라는 것을 다 안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김정일 독재 때문이라고 몰래 들 말한다고 한다. 내놓고는 말못해도 인권유린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한다고 한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못산다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법기관 일꾼이라도 돌아서면 북한에 이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당국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가두어 놓

¹⁶⁵ 남중인(인민무력부 국제연합무역회사 원산 지사장, 2003년 3월 탈북)의 증언.

¹⁶⁶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년 7월 18일.

고 있다는 것을 다 알며 주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게, 미개하게 한다고 인식한다고 한다. 기차간에서 승객들이 담화하는 것을 보면 김정일에 대한 불평, 정책에 대한 불평을 다 말한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한 사람 말 꺼내면 다 따라서 불평을 말한다고 한다.¹⁶⁷

7·1조치 이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 높은 세율은 북한주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했지만 이제는 북한주민들의 소득구조와 소득수준에서 볼 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주택사용료가 높게 인상되었으며, 공장·기업소도 공장부지 사용료를 내야하며, 농민들은 땅세를 내야 한다.

주민들은 노임을 못 받는데 세금을 어찌 내느냐며 항거한다고 한다. 세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가의 역할 변화와 국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는 이제 대가정의 부모와 같은 기능이 아니라 세금 징수기관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7·1조치를 더욱 적극적인 개혁의 조치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소극적인 결과에 머문데 대한 좌절감이 김정일에 대한 실망으로 발전된 측면이 많다.

북한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욕을 많이 한다고 한다. 특히 김정일 욕을 많이 하는데 “나라 수령이 사람들 다 죽인다, 정치를 잘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경제봉쇄해서 못산다고 가르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왜 못사는지를 다 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김정일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¹⁶⁸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한 북한의 정치를 두고 하는 말이 “정치가 아

¹⁶⁷ 하희웅(함북 회령시 무산군 위생방역소 위생의사, 2003년 9월 탈북)의 증언.

¹⁶⁸ 서선창(함북 회령 피복공장 자제인수원, 2002년 10월 탈북)의 증언.

니라 망치”라고 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도구라는 뜻이다. 7·1조치가 김정일의 경제무식의 광고문이며, 전면적 파산선고라고 인식한다고 증언한 탈북자도 있다.¹⁶⁹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북한이 언젠가는 개혁·개방을 앞두고는 못산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을 장사한다고 잡아 가고 때리고 물건을 뺏지만 시장에서 살아가면서 온 몸으로 깨달았으며 그런 통제 속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삶의 터전으로 여겼다. 이들에게 사회주의라는 말은 아예 입에서 없어졌으며 언제 개방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개방이라는 말의 의미는 장사를 맘대로 하게하고, 직업도 마음대로 고르게 하는 것 등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7·1조치 이후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고 기대하였는데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개방도 아니다. 풀어놓지도 않고 개인농도 아니고, 배급도 안주고, 장사라도 하게 할 것이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다고 한다. 앞에서는 사회주의 구호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저 개XX들 언제 쓰러지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못한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내놓고는 말 못하고 흔히 하는 말이 “안돼, 절대로 안돼”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부가 하는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표현하는 말이다. 50년 동안 이밥에 고기국 타령을 하였고, 해마다 강성대국 건설한다고 떠들었으며, 2차 7개년계획을 실행하면 식량생산량이 얼마, 옷감이 얼마라고 해마다 주장하였으나 모두 거짓말로 판명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친구끼리 모여 앉아 하는 말이 북한 정부 정책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나왔

¹⁶⁹ 남중인의 증언.

다, 월급도 올랐다, 시장경제, 농민시장 조치 나왔다”하면, 한 사람이 하는 말, “안돼, 절대로 안돼”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 정책일지언정 평생을 속아 살아왔기에 그렇게 간단히 표현한다고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⁷⁰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치체제에 복종하지만 사실상은 절대 다수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을 품고 산다고 한다. 자기 가족이 굶고 죽고 하는 처참한 생활환경에서 정치적으로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원성과 한이 하늘에 닿았으나 하소연 할 데 없기 때문에 오직 가족끼리만 한을 나누는 정도이다. 경제적 변화가 조금 있으나 너무 늦었으며 주민들의 한과 원한을 풀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는 탈북자가 많다.¹⁷¹

종합해볼 때 7·1조치는 북한주민들이 당국을 불신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7·1조치에 대하여 처음에는 개혁·개방 한다고 착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금방 “그러면 그렇지, 감파냐처럼 기만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장사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하도 속고 속이니 이제는 지혜로워졌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전에는 위에서 오는 통제를 수용하였으나 이제는 자체 머리로 소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정부가 야금야금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뇌화 시키면서 개방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한다.¹⁷²

¹⁷⁰ 서만영(44세, 함북 단천 시병원 의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¹⁷¹ 위의 증언.

¹⁷² 김숙영(평남 남포시 보위부 자료실 지도원, 2002년 10월 탈북)의 증언.

라. 불평등 증대와 간부계급에 대한 적대감 증대

계획에서 시장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배급제와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면서 일반주민들은 시장 바닥에 내팽개쳐졌지만, 간부들에게는 7·1조치에 의거 높이 인상된 노임을 주고 고위급과 군대에는 배급도 챙겨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북한에서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아래 인민을 위하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인민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이 당이라든지,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한다든지, 당은 지도자에 호감을 주게 한다든지,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당이라든지, 문제를 당에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는 등의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주민들은 걷은 회고 좋아도 속은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민심이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이제 북한 당국의 정책이 간부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인민들에게는 무력으로 억누르고, 지식인층에게는 회유하며, 간부와 군부에게는 우대한다는 것이다. 새 경제관리체제 이후에 일반주민들에게는 배급이 전혀 없으나, 군부, 안전부, 보위부일꾼들에게는 철저히 배급과 월급도 주었기 때문이다.¹⁷³ 간부들에게는 월급도 주고 유상이지만 배급도 주는 셈이다. 즉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장가격과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배급을 받는 것 자체가 큰 특혜이다.

그런데 사실은 간부에게도 배급을 주되 직급에 따라 주는 양이 다

¹⁷³ 서만영(44세, 함북 단천 시병원 의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르다. 간부들에게도 부류와 직급에 따라 다르다. 시당 부장급 이상, 군당 책임비서 정도이면 배급소를 통하여 배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협동농장에서 바로 실어다 주는 등 보이지 않게 공급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하의 간부는 불투명하다고 한다.¹⁷⁴ 군인(현역, 인민보안성, 보위부), 당(높은 직위, 낮은 직책은 해당안됨) 간부들에게는 배급이 100% 나간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배급이 아니라 군량미공급이라는 명분으로 나간다고 한다. 그 배급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쌀 1kg당 40원 정도의 가격으로 배급이 주어진다고 한다. kg당 40원이면 시장가격(2003년 7월 현재 250원) 보다 훨씬 싼 국정가격으로 배급을 주는 셈이다. 과거에는 1원20전 정도로 배급받았는데 당시 시장가격은 40원 정도였으니 훨씬 더 큰 가격 차이를 누렸었다. 그러나 그 밖의 생필품은 모두 시장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는 등 과거에 비해 혜택이 덜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위급을 제외한 간부, 즉, 도당, 시당, 중층계층의 간부들, 지도원급, 과장급은 어려워졌다고 한다. 국정가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¹⁷⁵

서민은 배급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배급의 혜택을 못받지만, 간부는 아직 배급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처럼 이원화된 제도가 지속되면 불만이 표출될 것이다. 지금도 일반 주민의 배급은 설에 2~3일분, 김일성·김정일 생일에 2~3일분 정도 나온다. 양정기관, 당, 사법검찰, 안전부, 보위부 이런 권력층에 한해서 물밑으로 공급된다. 배급을 100% 탔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야시장과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배급을 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이다.

이러한 불평등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뇌물과 착취, 그들의 주민에 대한 억압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가난과 공핍, 정

¹⁷⁴ 박명희(함북 00시 교사, 2003년 7월 탈북)의 증언.

¹⁷⁵ 서만영의 증언.

책 실패의 책임자들로 인식된다고 한다. 보위부 및 당일꾼들은 잘사는 사람에게 붙어서 고이는 것 받아먹고 살며 지나다가 돈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 담배 1갑이라도 얻어간다고 한다. 농장에서 간부들이 쌀을 뽑아내는 방법은 수확고를 작게 보고하고 차액을 간부들이 횡령한다는 것이다. 쌀 도둑은 다 농장에 있다고 한다.¹⁷⁶ 특히 주민들의 가장 큰 증오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인민보안성(또는 사회안전부)일꾼이라고 한다. 인민보안성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가장 많이 받는다.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갖은 명분을 붙여서 뺏고 벌금 물리고 하는 것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갈수록 주민들의 국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마음속으로 증오심이 가중되고 있다. 폭압제도 때문에 행동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말로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 이제 북한에서 간부에 대한 불신, 증오심은 극도에 달했다고 한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배가 고파본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앞에서는 충성을 맹세하여도 마음으로는 외면한다고 한다.¹⁷⁷ 당일꾼은 다 자기 권력 행사하면서 살려고 한다고 주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당일꾼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약간만 직위가 있으면 사람을 깔보고 돈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않는다고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정말 맞지 않는 구호라고 인식하고 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간부는 1%도 안된다고 한다. 전쟁나면 총부리를 간부에게로 거꾸로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¹⁷⁸

¹⁷⁶ 하희웅(함북 회령시 무산군 위생방역소 위생의사, 2003년 9월 26일 탈북)의 증언.

¹⁷⁷ 서만영의 증언.

¹⁷⁸ 하희웅의 증언.

4. 사회질서의 변화

가. 가족내 질서의 변화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생계가 직장에서 주어지는 월급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 하는 부녀자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가정내 여성들의 지위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북한에는 주로 여성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산다고 한다. 남자는 직장에 출근해야 하며 시장에는 주로 부인이 나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남편이 벌어드는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여자가 버는 것으로 사는 셈이다. 과거에는 남자의 권위가 세었으나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돈을 못 버는 남자는 천대받는다. 부인이 장사 나가면 남편은 집에서 집을 지키는 집이라고 하여 남자를 ‘자물쇠’라고 부르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자는 집 지키는 ‘멍멍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의 ‘낮전등’ 등으로 불리며,¹⁷⁹ 남편이 아니라 ‘불편’이라고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⁸⁰ 옛날에는 결혼상대자로 마음씨 좋은 여자를 선호하였지만 이제는 장사 잘 하는 여자를 선호한다고 한다. 가족 내에서 정치에 의한 권위주의가 흔들리고 경제중심의 역할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가족내 변화 현상은 가족해체의 현상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난으로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혼자라도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이혼율이 상승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귀순한 김산⁰도 식량난의 결과 가정파탄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⁸¹

¹⁷⁹ 위의 증언.

¹⁸⁰ 김숙영의 증언.

¹⁸¹ 이복신(무역회사 근무, 2002년 입국)의 증언.

북한의 북부 변경지역에는 가족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사는 집이 많지 않다고 한다. 한가족이 한집에 모여 사는 집이 많지 않으며, 생활이 향상될 때까지 각자 뿔뿔이 헤어진다고 한다.¹⁸²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사회일탈의 하나는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이기주의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족 해체가 많아지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이 부족하여 어른들이 각자 흩어져 식량을 구입하러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되기 일췌이며, 집에 남은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꽃제비가 된다고 한다.

나. 사회질서의 아노미

북한에서 최근 사회질서와 사회기강의 이완은 두 가지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사회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시장경제적 생활양식이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무질서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난이 가져온 사회적 일탈행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주의적 사회보장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중심의 새로운 사회질서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의 질서와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다. 북한에서 공식 이념은 집단주의지만 경제난이후 주민 생활은 집단주의라기보다는 이기주의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실제 백성들 속에서 자기 가족이 굶어죽는 현실에서 집단이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이제 자기 외에 아무도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집단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결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양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한다고 한다. 북한

¹⁸² 김0희(43세, 함북 청진시 선전대 근무)의 증언.

주민의 이기주의는 자력갱생의 수준을 넘어서 매우 사회일탈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기주의는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마찬가지이다. 중앙당, 기층 당조직까지 모두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간부들이 국가의 혁명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철저한 개인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당간부들이 개인주의로 살기 때문에 보위부, 안전부도 그렇게 살며, 군대도 그렇게 산다고 인식하고 있다.

5. 소결: 북한사회의 르네상스적 징후

위에서 논의된 대로 북한에서 7·1조치 이후 변화된 사회의식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회주의체제 원형’(맨 좌측열)이 ‘원형의 사회의식’(2째열)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7·1조치 이후 변화’(3째열)하였다. ‘7·1조치 이후에 변화’된 사회의식은 ‘변화된 북한체제’(맨 우측열)의 구조적 산물이다.

<표 V-1> 7·1조치 이후 변화된 사회의식

사회주의체제 원형	원형의 사회의식	7·1조치 이후 변화된 사회의식	변화된 북한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정당하다	→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시장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의 의존성	→ 장사를 통한 자력갱생	계획경제의 붕괴
배급제	사상성 중시	→ 돈 중시 및 물신주의	배급제의 붕괴
명령경제	소극적 노동의식	→ 적극적 근로의욕	경제의 사영화
집단주의	집단주의	→ 개인주의	자생적 행위규범

북한의 경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시장경제적 요소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자에 대한 암흑기적 미몽에서 점차 깨어나 자기 자신이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의식의 각성을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인식변화를 주도했던 계층은 체제에서 배제된 적대계층과 동요계층이다. 체제에 통합하여 출세할 기회가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장사해서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인식전환을 했던 것이다. 경제난 속에서 체제에 통합한 사람들이 오히려 아사당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확산된 것이다.

신적인 경지의 김일성은 사망하고 김정일은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고 실패만 하고 거짓말로 기만하는 독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이제 김정일에 대한 의존성에서 해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체사상에서 이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자기생계를 자기가 벌어야 하는 변화된 상황에서 의식 각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개인주의, 인간의 해방을 각성시키는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주민들은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신’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주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당과 수령이 부여하는 시혜로 산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으로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하여 사는 것이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각성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르네상스는 주체사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시작되는 셈

이다. 사실은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한 반발이다. 지금까지 이해한 주체사상은 주인 행세를 한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국가였고 김정일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체제 변화의 단계 평가

1. 북한체제의 변화 내용

북한은 겉과 속이 분리된 나라라는 인식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의 하나이다. 겉으로는 사회주의경제, 속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겉으로는 계획경제, 실제로는 시장경제라고 보는 것이다.¹⁸³ 7·1조치를 계기로 양극간의 차이가 다소 감소한 셈이다. 북한 당국이 시장요소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앞의 제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장의 요소는 계획의 요소를 능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계획을 주로하고 시장을 보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7·1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현실화하여 시장논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다. 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종합시장이 도입되었고, 시장의 거래를 현물의 물물교환이 아닌 화폐로 교환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에 노동보수를 현물로 주던 것을 현금으로 전환함으로써 화폐경제가 도입되었다. 소비재뿐만 아니

¹⁸³ 친은정(경제학 교수, 2002년 3월 탈북)의 증언.

라 생산재 거래 부문에서도 화폐경제와 시장경제가 도입되었다. 식당과 상점 등의 일부 서비스업과 유통부문이 사영화 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유제에 있어서도 일부 사영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개인과 기업에 이윤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기업차원에서는 경영평가의 지표를 과거의 생산량 위주의 평가지표에서 이제는 매출액에서 생산원가를 공제한 번지표의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생산원가를 줄이고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업경영의 목표로 전환된 것이다. 7·1조치 이후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경제체제의 새로운 구호인 실리사회주의는 곧 시장사회주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리사회주의는 북한식 시장경제의 개념인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개혁·개방 정책의 지향방향을 ‘실용주의’라고 일컬었던 것을 회고한다면 북한의 ‘실리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질적인 체제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이라고¹⁸⁴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회주의를 확고히 지킨다는 말은 이윤극대화를 의미하는 실리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사상적 알리바이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현물배급제를 폐지하고 임금노동제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칼 맑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체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임금노동제(wage labor)가 북한에서 도입된 것이다.

북한체제의 변화에서 경제체제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사회부문의 변화는 더욱 현저하다. 배급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임금노동제가 도입되었으며, 종합시장제도가 도입된 상황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가치의식을 크게 바꾸었다. 이전에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면 생

¹⁸⁴ 김정길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1), p. 13.

계가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상품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생활양식이 변화된 것이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현물배급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돈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사상이나 이념은 2선으로 후퇴하고 물질 우선의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월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는 월급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이전의 월급은 용돈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계비 개념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배급체제 하에서는 현금이 별 의미가 없었던 데 비하여 이제는 화폐경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입당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관문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일반주민들에게는 당원자격이 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당에 별 관심이 없다.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 체제의 시장화는 시장 자체의 추진력에서 나온 것이지 당국의 정책적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당연히 이러한 변화추세를 통제하여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되돌아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변화의 추진력을 당국의 통제노력이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선신보』는 북한이 도입한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도 오늘의 조건에서 나라가 허리 펴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체제(즉, 대안의 사업체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가경제를 추켜세우면 다시 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⁸⁵ 북한 당국은 당연히 이러한 변화추세를 통제하여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되돌아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변화의 추진력을 당

¹⁸⁵ 『조선신보』, 2003년 10월 24일.

국의 통제노력이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번 돌아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시장화의 추세를 ‘실리사회주의’라는 말로 은폐하고 있다. 그럼에도 7·1조치가 새로운 변화의 실험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실리증시의 원칙을 세워 경제의 모든 단위가 초행길을 걸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경제부흥을 위해 다른 방도는 없으며 경제관리개선은 아마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였다.¹⁸⁶

『조선신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리사회주의의 대담한 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인민들도 재정부담으로 모든 생활이 보장된 과거를 이제는 먼 옛날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¹⁸⁷ 더욱이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 역할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조선신보』는 북한에서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시장의 기능을 홀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표현도 쓰고 시장 운영을 위해 다른 나라의 협조를 받으려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시장 기능 확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종합시장은 어느덧 현 단계 북한 경제개혁의 핵심적 및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¹⁸⁸

이러한 제반 시장요소가 도입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체제는 이제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에서 너무 멀어진 것이다. 제

¹⁸⁶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¹⁸⁷ 위의 신문.

¹⁸⁸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p. 259.

도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기능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명실상부하게 북한은 시장사회주의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조치의 내용에 개혁적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다. 7·1조치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일반적 특징을 거의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표현과 관계없이 7·1조치의 개혁성은 그가 담고 있는 내용의 개혁성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¹⁸⁹

2. 시장사회주의 단계

이렇게 변화된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 단계에 비추어 본다면 어느 단계에 해당될까? 이 글은 북한이 시장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일찍이 1961년에 브루스(W. Brus)는¹⁹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전시공산주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분권적 사회주의로 나누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①직업과 소비재의 선택, ②경상적 생산, ③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①도 통제에 두는 것이 전시공산주의이며, ①은 분권으로 개인이 하지만 ②를 중앙집권적으로 하면 중앙집권적 사회주의이다. 그에 비하여 ③을 중앙집권적으로 행하지만 ②도 분권적으로 행하는 것을 분권적 사회주의라고 한다.¹⁹¹ 브루스는 분권적 사회주의는 관료적

¹⁸⁹ 조명철,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p. 150.

¹⁹⁰ W. Brus,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first published in 1961 in Polish)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2).

조정과 시장적 조정간의 보완적 기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계획과 시장이 결합할 수 있는 시장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후에 브루스는¹⁹² 소유제는 공유제이지만 투자결정까지도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사회주의를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라고 명명하였다. 그런데 브루스는 여전히 199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의 개념은 제시하지 않았다. 1980년대 말에까지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현실에서 벽에 부딪치자 사회주의경제를 구하기 위하여 계획을 일부 시장으로 대체시키는 움직임이 나왔다. 주로 동구에서 ‘시장사회주의’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브루스의 ‘분권 모델’이다. 이 모델은 실제 헝가리의 경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과 경제학자 오타 시크(Ota Sik) 등에게 계승되어 ‘프라하의 봄’의 경제사상으로 되었을 것이다. 헝가리는 1968년부터 ‘신경제체제’(New Economic Mechanism)를 실천하고 이른바 ‘시장사회주의’를 도입하였다.¹⁹³ 시장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 시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이유는 사회주의체제의 기득권 엘리트들의 저항도 많았으며 생산수단의 공유제와 시장기능 간의 결합은 기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⁹⁴ 결국 1989년 혁명에 의하여 재빨리 공산당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전환하였다.

¹⁹¹ 나카가네 카츠지, 이일영·양문수 역, 『중국 경제발전론』 (서울: 나남출판, 1999), p. 248.

¹⁹² Wlodzimerz Brus and Kazimierz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¹⁹³ 나카가네 카츠지, 『중국 경제발전론』, p. 257.

¹⁹⁴ Wlodzimerz Brus and Kazimierz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62.

시장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장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 시장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제와 시장은 상호 정합적(consistent)이지 못하다. 시장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시장사회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은 시장경제로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1989년에 혁명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사회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1982년 제12차당대회에서 계획경제를 주로하고 시장조절을 보조로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1987년 제13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정의하였다. 1992년 제14기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천명됨으로써 중국은 시장을 주체로 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국시로서 결정되었다.

북한은 브루스가 개념화한 단계에서 볼 때 전시공산주의체제와 중앙집권적 사회주의체제는 이미 아니며 분권적 사회주의체제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장사회주의를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분권적 사회주의체제로 본다면 북한은 ‘시장사회주의’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Ⅳ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가동되고 있는 제반 시장적 요소와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중앙계획체제, 연합기업소 체제 등의 실태를 감안한다면 북한은 계획보다는 시장이 더욱 생명력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사회주의라고 평가할만하다. 그런데 북한은 중앙집권과 분권, 계획과 시장, 통제와 자율의 보완을 추구하지만 사실상 중앙집권부분은 기능 부실화되고 있으며, 계획도 외해되

고 있고, 통제도 와해되고 있다. 사실상 분권과 시장과 자율만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¹⁹⁵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의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단계인 중국식 ‘시장사회주의’(또는 사회주의상품경제)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과 사상해방을 새로운 정책노선의 구호로 선전하였으며, 정책노선과 실제 정책의 내용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도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관리방식을 개선한다는 정도의 구호에 그치고 있다. 중국은 1983년부터 농업이 포산도호제 하에서 사영화 되어 생산성이 급속히 향상되었고 농민들이 잉여생산물을 바탕으로 농촌과 도시에서 상업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는 농촌 농민들의 변화가 사회부문의 자본주의적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도시공업 부문은 국가가 주도하고 사상을 해방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하였다. 그에 비하여 북한은 도시 노동자들이 상업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지대추구의 행위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즉, 생산성 향상 없이 교환을 통한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모순적인 관계이다. 생산을 통한 공급부문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유통부문에서 교환관계만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생산부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므로

¹⁹⁵ 박형중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단계를 스탈린적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부분 분권화된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부분개혁체제)→사회주의 상품경제(시장사회주의)→사회주의시장경제의 단계를 따라 변화된다고 보았다. 북한은 이중에서 2002년 7월을 전후하여 계획경제를 전제로 효율성·채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개혁체제의 테두리 내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비재 생산과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의 자율경영을 허용한 것 등은 부분개혁체제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였다. 종합하여 북한의 최근 “개혁은 논리와 조치에 있어서 중국의 1979~1984년, 베트남의 1980~1982년간의 부분개혁체제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박형중,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의 위치와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57.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 농업부문에서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처럼 농업부문에서 포산도호제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 농민이 봉건제 질곡에 묶여있다는 것은 중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가의 통제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경우 통제가 너무 심하다. 중국의 경우는 1970년대 말에 중앙권력의 과도기라는 권력의 공백기가 있었다는 것이 농업부문 변화의 정치적 환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겨야 농민들이 SULNAM을 추진할 여지가 생기고, 중국처럼 농업 부분을 중심으로 경제가 개혁될 수 있다. 농민들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상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다.

북한의 농민들의 성향에 있어서는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의 농민들은 기존체제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있다. 북한농민들의 의식은 현재 북한의 정책 속에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축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 초기의 토지개혁과 이후의 농업협동화 과정의 긴 터널을 거치면서 체험한 의식이며,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 하면서 만들어진 역사적 의식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화의 역사가 다르고 당국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북한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집단에 대한 사상교육과 사회통제를 철저히 가하고 있지만 그것에 의하여 농민으로서 본질적인 성향이 말살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 향후 북한의 변화 추세 전망

북한은 향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모델을 따라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각기 장점을 취합하는 방식의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특구 중심의 개혁·개방부터 시작하였다는 점과, 국경을 인접하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모델에서 참고할 점이 많다. 베트남의 경우는 미국과 전쟁을 치른 나라이며, 국토의 면적 면에서 한반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식의 방식에서도 참고할 것이 많을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모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시장사회주의와 같은 소극적 개혁조치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중국도 점진적인 방식이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시장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이행하였다.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적 측면에서의 개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이 공통적으로 개혁·개방과 도이모이를 통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혁·개방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지도부의 주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밑으로부터 기층민중들의 주도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층민중들이 자구적 차원의 일탈적이고 불법적으로 시작한 경제행위들이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는 생계를 해결해내고, 높은 생산성과 노동 동기를 창발한다는 데서 당국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층민들이 자구적인 차원에서 불법

적으로 가족끼리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생산한 농산물을 매매 함으로써 자구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지도부에서 전망이 있는 발전모델로 인식하고 이들을 양성화한 것이 개혁·개방의 시초였던 것이었다.

중국의 경우 일부지방의 농민들이 불법으로 농가경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 지도부의 교체기에 전역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었던 것이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방정책 그 자체는 등소평의 판단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가족농으로 특징지어지는 포산도호제(包產到戶制)를 도입한 것이라든지 토지사용권을 사유화하는 조치, 생산물을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은 농민들의 불법적인 주도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국가가 묵인하면서 정책화된 것이다.¹⁹⁶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던 국가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허용해준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전개되던 계약제가 공산당에 의하여 공식화된 것이 1981년이였다. 베트남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도이모이를 채택하기 이전에 베트남, 특히 남부베트남 농민들은 이미 도이모이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형성된 개인주의와 암시장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78년에 큰 홍수피해로 남부가 기아선상을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인민들이 비공식부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든 상황 하에서는 협동농장이 유지될 수도 없었다.¹⁹⁷ 이러한 상황을 맞은 베트남공산당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¹⁹⁶ Daniel Kelliher, *Peasant Power in China: The Era of Rural Reform, 1979~1989*, p. 233.

¹⁹⁷ 전경수, 『전경수의 베트남일기』 (서울: 통나무, 1993), pp. 309-312.

에 이 문제를 토론하였고, 사유화를 향한 인민들의 모티베이션이 확인된 이상 사회주의 사회내의 사적부문을 양성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산화 이후의 사회주의적 양식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되었고, 숙고 끝에 베트남 공산당이 내린 결정이 1986년 본격 추진된 도이모이 정책이었다.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가족제생산양식과 유교적 노동윤리가 만나면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감당하기 힘든 사유제에의 모티베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모티베이션의 힘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출로를 열어주자는 것이 시장 경제의 도입이다.¹⁹⁸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 북한의 경우도 농민들의 성향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북한의 사회집단 가운데서 개혁 조치를 가장 열망하는 집단이 농민층이다. 북한의 농민들은 과거 1958년 농업협동화 이전에 개인농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후세대도 부모세대의 전언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북한 농민들은 현재의 못먹고 못사는 문제의 책임이 토지제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누구나 농업협동화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인농으로 전환해야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농촌지역에서의 이러한 생각은 농민, 간부 모두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협동화는 잘못된 정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농민들은 개인땅을 주면 좋아할 것이며, 땅을 옛날처럼 나누어 주면 잘 살 것이라고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 농민들은 땅을 개인에게 분배해주면 땅을 깨끗이 다듬어 알뜰하게 일할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모두 부지런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¹⁹⁹

¹⁹⁸ 위의 책, pp. 44-45.

¹⁹⁹ 임복신(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년 10월 귀순)의 증언.

북한에서 협동농장의 농작물은 시들해도 개인텃밭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매우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북한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관찰이다. 개인소유에 대한 북한농민의 애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에서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영농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북한은 현재 도시와 농촌에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적 경제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경제난 속에서 북한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은 아래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멀지 않아서 올 것이다. 북한이 경우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제도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가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개혁·개방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고갈된 생산요소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과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던 중국이나 베트남 보다 더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지만 북한은 7·1조치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 국영상점의 사영화, 임금노동제, 화폐경제, 소상공생산지 등의 추세를 역행하기 어려울 것인바, 향후 북한체제는 시장경제가 진전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요약 및 토론

VII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북한의 경제 부문에서의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체제의 사회부문에서도 시장화에 친화력이 있는 사회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결국 북한의 경제부문과 사회적 부문에서 시장주의적 요소가 병행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기존에 진행된 체제변화를 묵인하여 양성화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이것이 7·1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다. 북한에서 일어난 7·1조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폐지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이론적 체제였던 대안의 사업체계가 폐지되고 대신 시장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 체제의 시장화는 시장 자체의 추진력에서 나온 것이지 당국의 정책적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농업에 대한 포산도호제를 실시할 당시 중국 당국은 경제체제의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중국 당국이 도시부문의 국가경제부문에 관심을 집중하여 농촌의 경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농민들이 경제논리에 의하여 사영화를 주도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중국처럼 변화를 방치하지는 않겠지

만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통제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통제 메카니즘 자체가 시장에 포섭되어 공생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을 북한 당국이 결정한다는 시각을 가지면 7·1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적·유보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 정부당국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주민들의 시장참여행위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제 7·1조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당국이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양성화한 것이다. 마치 베트남에 도이모이와 중국에서 포산도호제가 시행되게 된 것과 유사하다. 지도부가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여도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실행에 끌려가게 된다. 또한 북한 당국이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면 할 수 없게 된다. 2002년 신의주 특구 개발을 시행하고자 하였을 때 중국이 이에 반대하여 양빈 행정장관을 체포하자 지금까지 진전이 없으며,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추진하여 외자를 도입하고자 일본 총리를 북한에 초청하여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백하는 등 적극 외교를 펼쳤지만 제2차 핵문제가 터지고 일본에서 납치자문제로 반복 여론이 높아지자 북한 당국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개방의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북한 당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암시장을 국영시장에 흡수시키고자 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의도였지만 두 달여 만에 오히려 장사를 양성화하고 종합시장을 설치하는 등의 정책방향으로 변경하고 말았다. 당국의 정책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벌이는 암시장 가담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종합시장은 장마당 축소 및 국가유통체계 조

치가 실패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처음에는 7·1조치를 통하여 암시장을 국영시장에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결국 암시장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주도에 의한 변화에 국가가 수동적으로 적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사회 변화의 동인은 북한체제의 모순에서 잉태하였다는 점에서 변화의 내용과 방향은 중시되어야 한다. 북한체제가 사회통제 차원에서 정권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출신 성분별 차별정책과 당원과 비당원간의 철저한 차별정책이 변화를 추동하는 근원이다. 북한의 양지에서 배제된 적대적 계층과 비당원들은 북한의 체제에서 시민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한체제에서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자격조차도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먼저 비공식 부문으로 눈을 돌려 장사를 해서 돈이나 버는 것이 낫다는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주도로 비공식 부문이 활성화되었고 암시장이 번성하였다. 암시장의 번성은 다시 공식경제를 마비시켰다. 공식부문의 상품들이 암시장으로 유출되어 거래되었고, 사람과 돈이 암시장으로 몰려들자 공식 부문은 꺾테기가 되고 말았다.

체제의 밖에서 곁돌던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장사에 나서서 북한 사회를 암시장 사회로 전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복잡계층의 체제이탈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들이 공식부문에서 이탈하여 비공식 부문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간부들을 뇌물로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뇌물로 간부들을 매수하고 결탁하여 계획경제체제의 벽을 넘어서 암시장을 확산시킨 것은 하나의 소리 없는 혁명이다. 암시장이 결국은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인 중앙계획경제체제를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농민들이 사용한 SULNAM 방식의 개혁과 유사하다. 북한의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spontaneous), 사회운동의 조직을 결성하지도 않고(unorganized), 변혁운동의 지도자도 없이(leaderless), 운동 참여자를 결속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도 없이(non-ideological), 그리고 정치적 체제변화의 정치적 목적도 없이(apolitical), 사회 변화를 추진한 운동(movement)을 해낸 셈이다. 감시와 처벌이 철저한 전체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무모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주의체제를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둔 채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북한에는 조직이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편견과는 달리 북한에는 아래로부터의 조용한 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뇌물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중국의 초기 개혁기와 유사하다. 시장요소가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위에서 당국의 주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향후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당국의 정책만을 판단의 근거로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적 변화의 동태성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나아가서 7·1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 변화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변화는 가히 북한의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당과 지도자에 대한 인식은 집단행위로 표출되지 않을 뿐이지 체제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방향의 변화가 일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변화

가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 공식언론의 주장대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개혁(Hidden reform)인 셈이다.

향후 북한은 시장사회주의를 지나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 갈 것인가? 7·1조치는 과거의 철저한 계획체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이 중국과 같이 성공적인 ‘사회주의시장경제’로 나아갈 수도 있고 자칫 구소련이나 동구와 같이 변화과정에서 자체 붕괴를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지금까지 경제난 해소를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선택하여 추진했으나 여의치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이 직면한 대내적 문제, 대외적 문제 때문에 중국, 베트남과 같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내적 제도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북한이 추진해야 할 것은 대외적 개방이다. 북한에서 고갈된 생산요소를 외부에서 수혈하지 않으면 대내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 개방이란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의 일원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자본주의세계체제에 재편입하였듯이 북한도 소멸된 사회주의진영을 대체할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자본주의권에 재편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제사회 편입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다. 사회주의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당면한 정책 과제는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협력 관계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다.

북한이 경험한 일련의 시행착오의 원인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개혁·개방의 의지가 미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핵문제를 어떻게 단기간 내에 매듭짓느냐가 대외개방의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나카가네 카츠지, 이일영·양문수 역. 『중국 경제발전론』. 서울: 나남출판, 1999.
- 대외경제연구원.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2002.7.25).
-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2.
- 서재진 외. “세계체제이론으로본 북한의 미래.” 서울: 황금알, 2004.
- 전경수. 『전경수의 베트남일기』. 서울: 통나무, 1993.
- 조명철 외.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Brus, Włodzimerz and Kazimierz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Brus, W.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first published in 1961 in Polish.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2.
- Chossudovsky, Michel. *Towards Capitalist Restoration?: Chinese Socialism after Mao*.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6.
- Fitzpatrick, Sheila. *Stalin's Peasants: Resistance & Survival in the Russian Village After Collectiv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Kelliher, Daniel. *Peasant Power in China: The Era of Rural Reform, 1979~198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Lynne Viola. *Peasant Rebels under Stalin: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Shane, Scott. *Dismantling Utopia: How Information Ended the Soviet Union*. Chicago: Elephant Paperbacks, 1994.
- Suraska, Wista. *How the Soviet Union Disappear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 Walder, Andrew.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Zhou, Kate Xiao. *How the Farmers Changed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1996.

2. 논문

- 김명철. “전반적 생산에 대한 계획적 지도를 집단주의적 원칙에 맞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
- 김상기. “번수입지표에 대한 소고.”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4.9.
- 김연철. “7·1조치 2주년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4.6.
- 김정길.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1.
-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답화 2001년 10월 3일).”
 <http://nk.chosun.com/original/print.html?year=&original_id=584>.
- _____.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

-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리명숙. “현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4.
- 리영남.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사상 발전에 기여한 연암 박지원의 화폐에 관한 사상.”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4.
- 리장희.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 류통영역에 대한 주체적 견해.”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1.
- 박재규. “6·29 서해사건 이후의 남북관계.” 통일IT포럼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2002.9.23).
- 박홍엽. “국영기업소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의 사회경제적 기초”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3.
- 서재진.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이후 농민들의 의식 변화.” 『현대북한연구』 (2002).
- 신지호. “7·1조치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4.7.
-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실패와 함의.”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현대북한의 연구와 남북관계』 (2004.9.17).
- _____.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운용과 과학중시 정책.” 『통일문제연구』. 제13권 1호 (2001).
-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003.3.
- 이 석. “북한의 중앙계획자, 과연 타일을 던졌는가?”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4.6.
- 정연호. “최근 북한의 달러화 사용금지 조치의 배경 분석.” 『KDI북한경제리뷰』. 서울: KDI, 2002.12.
-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2004).
- 정영태·박형중. “북한의 병력감축설 및 전민복무제 채택의 의미와 대책.” 통일정세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최경희.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공급의 경제적 내용.”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2.
- KOTRA 북한팀. “북한에 확산되는 자본주의 맹아.” 『북한경제속보』, (2004.5.28).
- Chirot, Daniel. “What Happened in Eastern Europe in 1989?.” in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The Revolutions of 1989*.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헌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헌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형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함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형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형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중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소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근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운,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근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